

안철수·문재인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2면

'성범죄와의 전쟁'
보복성 처벌을
부추기는 이유

▶ 6~7면

동아시아의 '그레이트 게임'
중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나?

▶ 10면

2012 대선과 진보정치
노동자·민중 후보
와 대선 전술

▶ 4면

이주노동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 12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1)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38

Left21.com

제89호 | 2012년 9월 17일 ~ 10월 7일 | 값 1,800원

추석연휴로 다음 신문은 3주 후에 발행합니다.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입만 열면
마말
배는

1%의 수괴

인혁당 유족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관련 기사 3면



이슬람 모독에 대한 아랍 민중의 분노는 정당하다
— 미국의 보복 시도 반대한다

관련 기사 8 ~ 9면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을 믿을까?

“한국인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거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된다.”

정신 나간 일본 우익을 옹호하는
전 주일 미대사 토머스 시퍼

“일본의 가장 한심한 점은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

일본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

“진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 미주리주 상원의원 후보 토드 아킨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난 이러이러한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의 1989년 인터뷰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박근혜] 말의 본뜻은 ‘뉴라이트의 판단에 맡기자’일 것”

역사학자 전우용

“거세했다가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남성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물리적 거세 법을 발의하며

“아마 문제제기를 안 할 것 같은 민원인만 끌라서 불심검문을 하게 될 것 같다.”

불심검문 강화 지침을 받은
한 일선 경찰관

“태섭이를 친구라 생각했는데 태섭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충격”

요즘 ‘미친 존재감’인 정준길의 뉘트리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일시 : 9월 23일 (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생용자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원직 복직을 위한
3차 범국민대회

일시 : 9월 21일 (금) 오후 3시
장소 : 미정
주최 : 생용차범대위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10월 8일)

강남역 11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간대입구역 4번 출구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인천 주안역 2번 출구

울산 현대차 4층 주차장 정문 건너편 (6시 45분~8시 40분)

격주 화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10월 9일)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통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내가 잘할지 모르겠다’는 안철수



안철수가 사외이사였던 포스코는 비정규직 노동자 하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것은 안철수가 ‘여자’가 있느냐 없느냐, 뇌물을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가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다. 그 점에서 우파 ‘검증’의 이면을 봐야 한다.

이면

안철수는 젊은 벤처 기업인으로서 대기업 독식주의를 비판해 왔지만, 포스코에 가서는 사외이사로서 6년 동안 거수기 노릇을 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하중근 열사가 포스코와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것도 안철수가 사외이사로 있던 2006년이였다. 이런 기업에서 안철수는 6년 동안 3억 8천만 원을 보수로 받았고, 스톡옵션을 팔아 약 4억 원의 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것은 그가 당선한다면 과연 그가 말한 개혁적 조처들조차 관철시킬 수 있을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보수적 관료들과 기성 정당의 국회의원들, 국가기구 바깥의 재벌들의 압력에 짓눌려 거수기 노릇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사실 그

는 벌써 한미FTA나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서 1퍼센트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안철수가 이미 26살 때 부모로부터 판자촌의 ‘딱지’(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를 통해 아파트를 얻었고, 전세살이도 거의 해 보지 않았다는 의혹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사회구조에 불만 갖지만 말고 그 시간에 도전하라’면서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는 20대에 부모의 돈으로 아파트를 얻으며 불공평한 사회구조의 혜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안철수에 대한 광범한 지지는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낳은 결과였다. 사람들은 사회 변화를 바라는데 기성 정치 세력들은 이를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공백을 안철수가 메운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은 “우리 사회의 반정의를 폭로하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더 이상 이런 사회를 지켜볼 수 없다는 변화의 바람이고, 민중들의 요구를 응집한 열망”이다. 따라서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가 아니라 “이 땅의 서민

들이, 노동자들이,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모순을, 비극을 고발”해 만든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주의 세력과 안철수 자신은 “무임승차자”라는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지적은 타당하다.

게다가 ‘안철수 현상’을 지속시키려면 사람들의 변화 열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세력을 결집시켜야 하는데, 정작 안철수는 그러기에는 매우 온건한 비전을 갖고 있고, 그가 결집시키려는 세력도 기껏해야 민주당이나 이현재 같은 ‘신자유주의 전도사’다.

안철수의 비전과 세력이 구체화할수록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사이의 모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가 선뜻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못해 온 것은, 이런 딜레마 때문일 것이다. 최근 안철수는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텐데 걱정”이고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솔직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사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안철수가 내놓은 온건한 개혁 과제들조차 ‘1퍼센트의 기득권’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안철수의 생각’은 실패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안철수나 문재인만 바라 바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사람들의 변화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급진적 비전을 제시하고 대중적 행동을 건설해 나가며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을 결집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안철수를 통해 변화를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 행동에 나서 이 사회를 바꾸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현주

믿을 수 없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승자는 문재인이 될 것이다. 경선 주자들 중에는 노무현은커녕 그의 비서 실장을 뛰어넘을 인물도 없었다.

결국 ‘국민참여경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박근혜 대세론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던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은 실패했다. 선거인단 투표율은 60퍼센트도 안 되고 이진투구 속에 날개란이 날아다니는 지저분한 장면만 재연됐다. 누가 보기에 이 경선은 누가 안철수의 파트너가 될 것이냐를 가리는 ‘예선전’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한 내용적 혁신이나 쇄신없이 경선 흥행이라는 요행만 바라다 망한 것이다.

흥행 실패의 최대 원인은 민주당 그 자체에 있다. 광범한 반박근혜 정세에도 선뜻 민주당에게 손이 가지 않는 까닭은 그들이 집권 10년 동안 저지른 개악과 배신이 노동자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바로 이 민주당의 과거에 깊숙히 연루돼 있고 결코 그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는 인물이다.

문재인은 지금도 참여정부를 옹호하고 정당화한다. 그는 “참여정부는 총체적으로 성공한 정권”이라고 평가하며 “다만, 부분적으로 양극화, 비정규직, 부동산, 신자유주의 문제에 소홀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제국주의 점령을 도운 이라크 파병이나, 복지국가와 결코 양립할 수 없

는 한미FTA 추진, 비정규직 대량 양산 등이 ‘부분적’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노무현을 넘어서겠다’는 말과 달리 그는 노무현의 핵심적인 잘못을 덮는 데 급급하다.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대북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한미FTA는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만들고는 ‘법대로만 했으면’ 비정규직이 줄었을 것이라고 우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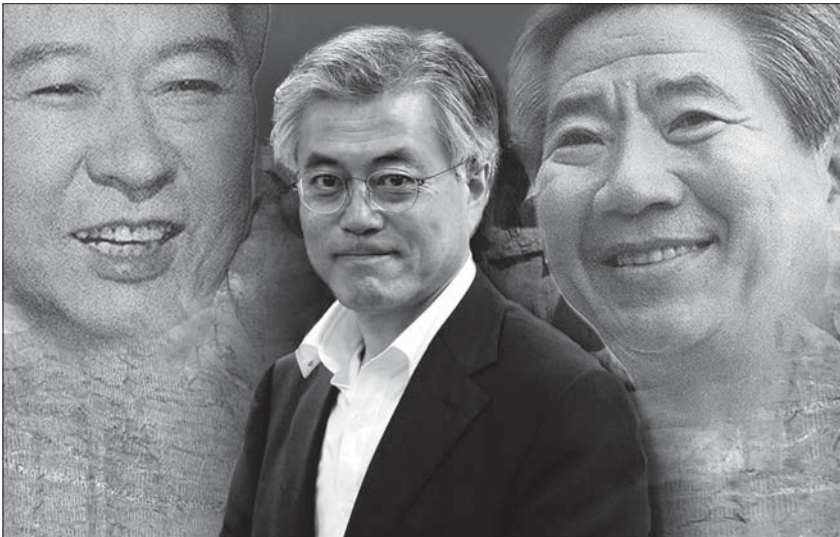
제주 해군기지도 처음에는 ‘군함이 잠시 머무르는 기항지’로 계획됐다면 노무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돌려댄다. 핵

폐기장 반대 투쟁이 벌어진 불안에서 경찰이 휘두른 무자비한 폭력은 기억에도 없다는 듯 ‘결국 주민 의견에 따랐다’며 자화자찬한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당시 경찰이 현대차 노조를 사찰한 것을 두고도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 보고”라고 변명한다.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그의 정책 공약도 앞뒤가 안 맞는다.

‘탈핵’ 선언을 했지만 50년 뒤를(!) 목표 삼겠다는 것이나, ‘핵발전소 수출’을 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두 거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두 거인’이 저지른 배신이 노동자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는데도?

장호중

웬만한 화장으로 가릴 수 없는 박근혜의 추악한 본색

김문성

“유신에 대해서도 ...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근혜가 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박근혜는 30여 년 전 일기에서 “유신 없이는 아마도 공산당의 밤이 왔을지도 모른다 ... 혼란 속에 나라를 빼앗기고 공산당 앞에 수백만이 죽어 갔다면 그 흐리멍덩한 소위 민주주의가 더 잔학한 것이었다고 말할지 누가 알 수 있으랴” 하고 민주주의 혐오증을 드러낸 바 있다.

이것이 “바뀌네” 쇼를 하며 전태일과 ‘국민대통령’ 하겠다던 박근혜의 실체다.

이런 본색 때문에 수도권 청장년 세대와 중도층에서 ‘박근혜 거부’ 정서는 패강력하다. 이들이 연말 대선 때 박근혜 반대표를 찍으려고 투표장으로 몰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박근혜는 갖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외연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박근혜의 추악한 본색은 웬만한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고 있다. ‘광폭’ 행보는 이제 독재정권의 ‘광기 어린 폭력’을 옹호하는 행보가 되고 있다.

박근혜가 박정희 독재를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현재가 유신체제의 유산을 딛고 서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정희가 강탈한 재산으로 만든 육영재단, 영남학원(영남대), 정수장학회, 한국문화재단 등이 박근혜가 1퍼센트 특권층의 삶을 유지하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왔다.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에게 전두환은 청와대에서 발전한 박정희의 비밀 자금 6억



“아버지보다 더한 딸이다” 9월 12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열하는 ‘인혁당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

여 원(현재 가치로는 2~3백억 원)을 줬다. 그리고 박근혜가 활동을 재개한 첫 기반은 육영재단과 영남대재단이었다. 1995년부터는 11년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낸다.

지금도 <부산일보>의 실질적 소유주인 정수장학회는 아바타 사장을 심어 놓고 박근혜 비판 보도를 한 기자들을 징계·해고하며 편집권을 통제하고 있다.

정수장학회의 장학생 출신자 모임인 상청회는 박근혜의 대선 사조직 기반이다.

또한 최근 폭로된 자료를 보면, 박근혜와 그 친지, 측근들 스물두 명이 문제의 재단 네 곳 중 최소 두 곳 이상의 이사를 순환하며 맡아 왔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반동적 이데올로기와 정책도 고스란히 상속 받았다.

5·16 쿠데타, 유신, 장준하 의문사, 인혁당 사형 등에 대한 박근혜의 반동적 입장과 생각은 확고한 신념으로 굳어져 있어서

쉽게 가려지지도 바뀌지도 않는 것이다.

박근혜가 철두철미하게 박정희의 ‘아바타’처럼 구는 것은 그 스스로 유신체제 권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1974년부터 공식직 퍼스트레이디로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예산과 비서관을 두고 정치 활동을 했고, 유신 말년 새마을운동 총재로 행사를 열 때는 장관, 서울시장, 정주영 같은 재벌들이 ‘수행’으로 나서는 등 위세도 대단했다.

박근혜가 최근 ‘1975년 인혁당 사건 판결은 고문과 허위 자백에 바탕한 조작이었다’는 2007년 법원의 재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도 이 범죄의 책임자 중 하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때 이미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박근혜가 내건 “100퍼센트 국민대통합”이란 구호도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 같은 급진화에 어깃장을 놓는 우파적

구호일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의 핵심 기반인 1퍼센트 지배자들은 ‘경제민주화’ 같은 사기성 구호들조차 불편해 한다. 이는 세계경제 위기가 다시 확산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위기감이 감도는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

그 때문인지 박근혜 본인도 ‘경제민주화’와 ‘줄푸세’는 다를 게 없고, 감세를 강하게 말하지 않는 건 이명박이 감세를 잘 해서라며, 복지를 위한 재정 확대(증세)에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결국 경제 위기 조짐들 속에서 박근혜의 당선은 지배계급 내에서도 각별히 잔인하고 반동적인 우파들이 득세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박근혜는 판 자체를 더럽게 만들어 노동계급 청년세대가 냉소적으로 투표에 기권하도록 만드는 한편, 우파를 단단히 결집시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듯하다. 진보진영의 자중지란과 민주당의 지리멸렬 덕분에 이런 책략이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에도 이회창 대세론이 거셌지만, 미군의 여중생 살해 사건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시위가 서울 한복판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참가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결국 이회창은 집권에 실패했다.

당시 거대한 대중투쟁은 노동자·청년들 속에서 냉소를 견어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줬다. 그러한 반우파 대중투쟁과 진보 대안 건설 노력을 결합시키는 것을 통해서 진보의 가치와 요구를 의제화하고 우리 편의 사기를 높인다면 박근혜 대세론에 균열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대선 이후 (누가 당선하더라도) 불의한 반민주·반노동 정책들을 쉽게 추진 못 하게 할 힘을 축적할 수 있다.

인혁당 사건의 진실

“살인마 박정희”와 그 정치적 후계자

“당시 진술은 고문, 구타,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의23부는 32년 만에 열린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던 재판에서 자백이 허위라는 재심 판결은 인혁당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과 사형 집행까지 죄다 거짓에 근거한 악랄한 살인극이었다는 뜻이다.

야수적인 고문과 협박, 혐의를 조작하고도 모자라 판결 하루 만에 사형 집행, 고문 흔적을 감추려고 시신마저 빼앗아 강제 화장.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악명 높은 인혁당 사건이다. 결국 인혁당 사건 유족들에게 국가가 6백3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내려졌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964년 당시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정권 퇴진으로까지 번지려 하자, 용공 조작 사건을 기획한다. 이것이 제1차 인혁당 사건이다. 그러나 검사들마저 증거가 없다며 기소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사건은 축소됐다.

8년 뒤,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자유 선거 등 민

주적 기본권을 말살하고 군사 독재를 영구화하려 했다. 이런 야만적 독재조차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 커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박정희는 민주화 운동 탄압을 위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하고는 그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문

이것이 제2차 인혁당 사건이다. 바로 이 사건으로 여영남, 도예중,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등 8인이 죽음을 맞았던 것이다.

관련 구속자들에게는, 인간이라면, 인간 예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온갖 고문들이 가해졌다. 심지어 그 부인들까지 중앙정보부로 데려와 감금하고 “내 남편은 간첩”이라는 자술서를 쓰게 했다. 이때의 자책감 때문에 고 김용원 씨의 부인 유승옥 씨는 일가족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했다고 재판을 하다 말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나가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사건을 취재하던 일본 언론인마저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선동죄 등으로 구속할 정도였다.

오직 고문과 협박으로 만든 허위 자백에 근거해서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다. 다음 날 새벽에 8명 모

두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판결 18시간 만이었다.

고문 흔적을 감추려고 시신마저 크레인을 동원해 가며 빼앗아 화장을 해 버렸다. 시신 탈취 차량을 막던 문정현 신부는 그때 당한 부상으로 지금도 다리를 전다.

이 사건은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 성장 속에 담겨진 핏빛 진실 중 하나다. 최근 “수출 1백억 달러를 넘기려고” 유신이 필요했다는 홍사덕의 발언은 지배자들이 차마 입밖에 내지 않던 본심일 것이다.

고 우홍선 씨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사형당한 이후 신문에 나온 박정희 사진을 그가 죽을 때까지 이가 아프도록 꼭꼭 씹어서 뱉곤 했습니다. 남편 산소에 매주 꽃을 들고 찾아가서 하늘을 향해 ‘살인마 박정희 천벌 받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한 번 외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꼭 세 번씩 외쳤습니다.”

이런 사건의 진상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05년 당시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진상 조사 때였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는 이 조사 결과를 두고 “한마디로 가치가 없고 모함 ...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결국 박근혜가 인혁당 사건에 관해 “두 가지 판결” 운운한 것은 그녀가 독재자·살인마의 계승자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폴라주 82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기억하기 좋은 나라

젊디 젊은 두 명의 노동자가 터미네이터처럼 일하고 터미네이터처럼 죽었습니다. 기억하기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illusion

2012년 대선과 진보정치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에 대해

지난 9월 12일에 노동자·민중 후보 추대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분당으로 진보 정치 세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대선 무대에는 부르주아 후보들만이 출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노동 대중의 요구와 진보적 의제가 실종돼 있다.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을 통해 이런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이 연석회의의 출범 배경이다.

물론, 연석회의의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의 전망이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진보 정치 세력이 몇 가지 이유로 정치적 주변부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달을 끈 통합진보당의 위기 사태도 한몫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누가 후보가 될지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연석회의의 노동자·민중 후보 출마시키기 시도는 의미 있는 노력이다. 연석회의가 제안서에서 밝혔듯이,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파탄이 빚은 참극”은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민중 운동 진영이 아무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안철수의 선거운동을 관망하기만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연석회의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이 운동을 광범하고 넓게 일으켜야 한다. 현재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적잖이 존재한다. 그럴수록 연석회의를 폐쇄적이지 않고 충분히 개방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때 통합진보당을 참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적잖은 연석회의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비민주성과 종파주의는 확실히 문제다. 그렇다고 통합진보당을 선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분당으로 통합진보당에서 스탈린주의 색채가 더 강화되었지만, 동시



9월 5일 노동자·민중 후보 추대 연석회의 제안 기자회견 노동자·민중 후보 운동은 부르주아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노동계급의 요구와 진보적 의제를 선전·선동해 진보 노동 대중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다.

에 그 당은 노동자 기반을 갖고 있는 노동자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을 배제하는 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 그 당을 지지한 광범한 대중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패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연석회의를 더 개방적으로, 더 광범하게 건설하는 것이다.

야권연대와 완주 문제

노동자·민중 후보 운동 내에서 후보 완주와 야권연대 여부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돼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양 편향이 있다.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야권연대 그 자체를 불가피한 타협이 아니라 미덕으로 격상시키는 반면, 일부 좌파는 “야권연대 반대”와 “완주”를 독자 후보 운동의 절대적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야권연대 성사나 독자 후보 완주 둘 다 노동자·민중 후보 운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노동자·민중 후보 운동의 목적은 민

주당이나 안철수의 입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진보적 의제와 노동계급의 요구를 선전·선동해 진보적 대중을 결집시켜 미래의 전투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둘수록 야권 후보 단일화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노동자·민중 후보 운동의 역설이다.

이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봉쇄하는 “독자 후보 완주” 주장은 박근혜 패퇴를 바라는 진보적 노동 대중의 정서와 접점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박근혜가 전태일재단을 방문하려 했을 때 김경주 쌍용차 지부장이 온몸을 던져 막았다. 만일,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전태일재단을 방문한다고 해도 김 지부장이 그렇게 했을까?

민주당이나 안철수는 결코 철저히 깨낼 수 없는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독자 후보 운동이 필요하지만, 그 운동은 박근혜 패퇴를 바라는 진보적 노동 대중의 정서와 소통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 “열린 독자 후보 전술”.

그런 점에서 연석회의가 “후보는 완주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자·민중의 관점에서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방침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일부 좌파들은 이를 두고 “야권연대 변형판”이라고 비난하며 연석회의의 참가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완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만 결정한 진보신당과는 함께하겠다고 한다. 연석회의와 진보신당 모두 완주 여부에 대해 신축성 있는 결정을 했는데도, 이중 잣대를 대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진보 정치인들과 노조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와는 함께 못하겠다는 종파적 태도다.

한편, 야권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연립정부 참여로까지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전자가 선진 노동 대중의 반(反)박근혜 정서와 소통하기 위한 불가피한 타협이라면, 후자는 부르주아 정당의 하위 파트너

로 정부에 참여해 그들과 함께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 정치 세력의 연립정부 참여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연석회의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연립정부 논의를 거부”하기로 한 것은 그래서 옳다.

정치적 대비

노동자·민중 후보 운동으로 집결한 세력들의 진정한 과제는 눈 앞에 닥친 대선에만 머무를 수 없다. 더 중요한 과제는 누가 당선하든 다음 정권 하에서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고 건설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커다란 위기와 모순에 봉착할 것이다. 안철수의 다음 말은 한국 지배자들의 걱정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텐데 걱정이다.”

격화하는 경제 위기 시기에 새누리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노동자·민중 후보 운동 진영은 노동계급의 저항을 고무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분당이 새로운 대안적 정치 구조물의 건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진보정당들이 있는데다 새 정당 건설 시도들이 영커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연석회의가 고스란히 “노동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로 직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연석회의가 새로운 정치적 결집을 자극하는 매개물이 될 필요는 있다.

바람직하게도,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 모임’과 ‘노동포럼’ 소속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중심이 돼 노동 중심의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우리는 이 시도를 지지한다. 그리 된다면, 통합진보당의 분당으로 약화된 진보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재구축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식

유로존 위기

드라기의 ‘바주카포’는 위기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유로를 구하기 위한 유럽정부들의 최근 대책을 분석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6일 유로존을 지탱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유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투자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했다.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신문은 드라기를 슈퍼맨으로 그린 만평과 함께 “유로화가 날아가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주요 산업국들을 대표하는 OECD 총재 앙헬 구리아는 “이번 조치는 유로화 위기에 맞선 바주카포”라고 했다.

지난 3년 동안 비슷한 선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전에 발사된 어떤 ‘바주카포’도 유로화 위기를 막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어떨까?

새 채권매입프로그램에 따라 ECB는 채권시장에 개입해 회원국이 발행한 단기부채를 매입할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긴축을 강요하는 협약에 서명해야 한다.

이 계획은 그리스같이 가난한 국가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 국가들은 이미 협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채권시장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채권매입프로그램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 수준으로 강등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 협약에 서명하는 것은 두 정부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이 채권매입프로그램은 차입 비용이 통제를 벗어나 급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시장이 이 약속을 신뢰하는 동안 드라기는 유로존 정부들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마저 분열을 낳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은 채권매입프로그램을 반대한다. ECB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찍어낸 화폐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 우려한다.

드라기는 이미 ECB가 유럽 은행들로부터 예치금으로 받은 8천억 유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유로화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예치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벌어질 문제를 보여 준다. 올 초 ECB가 내놓은 주요 대책은 장기대출프

로그램이었다. 드라기는 유럽 은행들이 ECB로부터 최대 3년 동안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열

1조 유로가 대출돼 차입 비용 상승 없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채권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넘쳐 났다. 하지만 은행들은 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페인과 이탈리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 이 자금은 ECB에 예치금으로 머물러 있었다. 악순환이다. 그리고 새로운 ECB의 대책들이 나올 때

마다 유로존 전체에서 더욱 악독한 긴축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증권시장은 드라기의 대책에 환호를 보낼지 모르지만 유럽 노동자들은 긴축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탈리아노총(CGIL) 대변인은 9월 8일 그리스 도시 살로니카에서 벌어진 대중집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노동자들이 9월 15일 마드리드, 9월 28일 로마, 9월 29일 독일 전역, 10월 20일 런던에서 투쟁을 벌일 것이다.”

살로니카의 긴축 반대 시위는 대성공이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우리는



9월 8일 살로니카 광장에서 긴축에 항의하는 노동자들

‘연금, 학교, 병원을 망치고 있는 긴축을 막기 위해 우리는 파업과 시위를 벌일 것이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시위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측면도 있었다. 파시스트 황금새벽당 지지율이 거의 10퍼센트에 이른다는 최근 여론조사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3개 정당 모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세에 공공연하게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파시스트가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면서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들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급진좌파 시리자(급진좌파연합) 지지율이 보수 신민당을 앞질렀고 공산당 지지율이 연립정부의 일부인 민주좌파를 넘어섰다.

우리가 소속된 안타르시아[혁명적 반자본주의연합] 역시 6월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우리는 연립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투쟁할 것이고 황금새벽당이 좌파의 성장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320호 / 번역 최용찬

‘2013년 체제’가 진보의 갈 길인가

지난해부터 친민주당 지식인들과 진보진영 일부에서 ‘2013년 체제론’을 주장하고 있다.

2013년 체제는 백낙청 교수가 처음 주장한 개념이다. 백낙청 교수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한국 사회가 일대 전환을 이룬 것을 ‘87년 체제’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하듯이, 2013년 이후의 세상 또한 별개의 ‘체제’라 일컬을 정도로 또 한번 크게 바뀌 보자”고 주장한다.

‘의회·행정 권력을 교체해서 남북 평화, 보편적 복지, 정의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평화·정의를 파괴해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2013년 체제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김종엽 교수는 “총선과 대선 가운데 어느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양대 선거 모두의 승리가 더욱 필수적”이며 “새로운 체제 수립의 관건은 … 연합 정치 성파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백낙청 교수를 중심으로 한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는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연대를 강력히 추진했다.

그러나 2013년 체제론은 곧장 이런 반론에 부딪히게 된다. 이미 앞서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평화, 복지,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민주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체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민주당 정권 10년은 평화, 복지, 정의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세계 평화를 망쳐 놓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을 적극 밀어붙였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했다. 제주 해군기지 역시 민주당 정부가 적극 추진한 사업이었다.

정리해고제를 통과시켰고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었으며, 한미FTA 체결, 대학 등록금 폭등이 이뤄진 ‘민주정부’ 10년은 복지와도 거리가 멀었다.

입으로는 ‘특권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외쳤지만 ‘삼성X파일’의 비리 왕초 이건희도 조사·처벌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무현은 자서전에서 스스로 “민주주의·진보·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의 배신이 낳은 대중적 환멸 덕분에 이명박 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 전여옥은 “한나라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데 최고의 공을 세운 것은 바로 노 대통령”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맨얼굴

이 때문에 2013년 체제론을 주장하는 지식인들도 민주당의 ‘혁신’을 주문했다. 백낙청 교수는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



2011년 희망버스 투쟁의 활력과 사회적 연대는 대중투쟁의 힘을 보여줬다. 2013년 체제론이 내포한 진보진영 우경화 압력은 이런 투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 필요합니다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한 ‘복기’를 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NGO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무상의료·무상교육 등을 내걸고 “좌클릭”을 할 때는 잠깐이나마 혁신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민주당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총선에서 김진표 같은 대표적 ‘새누리당 X맨’들을 공천했고 한미FTA, 민간인 사찰, 제주 해군기지 등 중요한 쟁점마다 오락가락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

이처럼 믿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4월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총선 패배의 탓을 “좌클릭”으로 돌리며 그나마 내뱉었던 개혁적 언사들을 철회하기에 급급했다.

이것은 민주당이 비록 포퓰리즘적 기반을 갖고 있으나 주로 기업주들의 돈과 인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근본에서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부르주아 정당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원금은 67억 원, 민주당 후원금은 45억 원으로 엇비슷했다(통합진보당은 1억 3천여만 원). 이 때문에 민주당의 ‘혁신’은 부르주아적 이해관계와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매번 실패와 배신으로 끝나곤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2013년 체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당과 ‘혁신’의 한계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태도를 취한다. 예컨대 김종엽 교수는 “대의를 위해

2013년 체제론은

곧장 이런 반론에 부딪히게 된다.

이미 앞서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평화, 복지,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민주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체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묵은 감정적 앙금을 털어낼 대법함”이 필요하다며 “이전의 정책이나 입장에 대한 반성이 충분하다. 앓다는 식의 과거지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한 온당한 불신과 비판을 “감정적 앙금”이나 “과거지향적 태도”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고 비판·반대만 한 것’에서 찾기까지 한다. 김기원 교수는 “선거에서뿐 아니라 집권 후 통치에서도 연대가 필수적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 민주정부 10년을 해매게 만

든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백낙청 교수도 “이념적 순수성을 다소 희생하면서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소수당이기에 때문에 부담 없이 거창한 주장만 하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구호를 내세[웠다]”며 진보진영과 진보정당을 비판한다.

그러나 오히려 민주노동당 등은 민주당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못했었다. 독립적인 대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우파에 맞서야 한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무비판적 동맹을 맺곤 했다.

적반하장

이런 악순환은 이번 총선에서도 반복됐다. 민주당과의 연대를 최상의 과제로 삼으면서 진보정당의 독자적 정체성은 약화됐다. 공동 공약에서 핵발전소 ‘폐쇄’는 핵발전 정책 ‘재검토’로 약화됐고, 한미·한EU FTA ‘반대’는 ‘재협상’으로,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도 ‘재검토’로 후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진보 염원 대중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반면 이명박과 박근혜는 제주 해군기지, 한미FTA 등을 밀어붙이며 우파를 결집시킬 수 있었다. 덕분에 이명박과 박근혜는 용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박근혜는 유력한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혔다.

그럼에도 2013년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총선에서 졌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하면 2013년 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며 ‘물지마 야권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무비판적인 동맹을 맺어서 설사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더라도 진정한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세계경제 위기가 깊어질수록 집권 세력이 자본주의 경제의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압력은 강해질 것이다. 유럽의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고통 분담’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삭감,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삶을 공격하려 들 것이다.

이미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정부는 경제 위기 압력 속에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부유세도 유명무실화하며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도 집권 직후 IMF 위기 탈출을 이유로 구조조정, 대량해고 등 개악을 벌였다.

2013년 체제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다. 백낙청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책무다 … 국가경영의 책임을 맡는 순간 사정은 달라진다”고 말한다.

김기원 교수 역시 “국가의 효율화나 사회적 신뢰문제를 도외시해선 곤란하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정리해고가 없을 수 없”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 야에 틀린 구호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2013년 체제론’이 ‘같이 정권을 만들었으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평화·복지·정의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인 진보진영의 독립적 투쟁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의회와 정부를 장악해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체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환기를 이룬 ‘87년 체제’에서 변화의 진정한 동력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대중 투쟁이었다.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청년들이 주역이 된 6월 항쟁은 권위주의 체제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고 뒤이어 벌어진 7.8.9월 노동자 투쟁은 민주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었다.

‘이명박근혜’를 패퇴시키고 평화, 복지, 정의를 쟁취하고픈 광범한 염원을 실현하려면 오락가락하는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이 아니라 이런 아래로부터의 투쟁 건설을 핵심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평화를 가로막는 제국주의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정의를 파괴하는 고장 난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진보진영이 우파에 반대할 뿐 아니라 민주당도 비판하며 이런 급진적 주장과 대안을 제시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투쟁을 더한층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지윤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단계씩 상향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믿을 것이 못된다. 이들은 2008년 위기 직전까지 서브프라임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매겨 위기를 키우는 데 한몫한 바 있다.

신용등급 상향과는 반대로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위기가 심화하며 경제성장률이 3퍼센트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지난 3월

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8월에도 6.2퍼센트 감소하는 등 계속 추락 중이다.

게다가 수백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로 부실화하면서 금융권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이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수출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조선·해운·건설·금융업계에서는 대규모 해고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고, 하반기 들어 GS칼텍스·KCC·한국GM·르노삼성 등에서도 각각 수백 명

씩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가 “경제불명의 경제민주화” 때문에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나선 것은 말뿐인 ‘경제민주화’조차 부당스러운 한국 지배자들의 위기 의식을 보여 준다.

이명박 정부도 하반기 경기부양책을 내놔지만, 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10퍼센트 인하’ 같은 조삼모사 정책으로 노동자·민중을 더 쥐어짜고 재벌들에게 더 퍼 주려는 것임이 드러났다.

한편,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것이 분명해지자 고통분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전 대표 유시민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더 많은 부를 고루 나눠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감내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본심을 드러냈다.

결국, 그는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설득하고 투쟁의 발목을 잡기 위해 진보정당에 눈을 돌렸던 셈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 위기와 한국 IMF 위기 때 드러났듯이, 고통분담론은 노동

자·민중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고 거대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살리자는 것이다.

게다가 고통을 분담하자며 유럽·미국 정부 등이 밀어붙인 강력한 긴축정책은 위기를 해결하기는 대안이기는커녕 경제성장률을 더욱 떨어뜨리며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맹목적인 이윤 추구로 이번 위기를 낳은 체제와 지배자들에 맞서 싸우며, 임금·일자리·복지를 확대시켜야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킬 수 있다.

강동훈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최미진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이 부추기는 보복의 논리에 휩쓸리기보다는 이 대책들의 실질적 효과를 직시하고 진정한 대안을 촉구하는 것이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진정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사실, 정부가 내놓은 강경책들이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전자발찌 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를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강간을 시도한 사례처럼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숫자가 늘었다는 점이다(2009년 0명에서 2011년 15명). 전자발찌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 가해자가 범행장소에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뿐, 예방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

‘화학적 거세’ 역시 효과가 없진 마찬가지다. 약물의 효과는 투입할 때뿐이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약물치료의 특성상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실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 동의 없이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신체 일부를 절단하겠다는 전근대적 ‘물리적 거세’는 말할 나위도 없다.

‘화학적·물리적 거세’는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 충동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관념만 재생산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상당수의 성폭력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분노, 불만, 소외감의 표출이기 때문에 호르몬을 조절한다 해도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다.

신상공개 확대 역시 범죄를 예방하기 보다는 범죄 전력자에 대한 낙인과 배척, 공격을 부추겨 이들의 사회 복귀를 힘들



사진 이미지

2년 만에 부활한 불심검문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경찰력 증강의 구실로 사용하고, 대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게 한다. 이 때문에 좌절한 개인들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키워 더 위험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신상공개 수위가 가장 높은 미국에서는 성범죄가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무고한 범죄 전력자들이 공격을 받아 희생됐다.

근거 없는

아동 포르노 제작·배포·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제시되고 있는데, 아동 포르노가 아동에 대한 납치와 폭력을 동반하곤 하기 때문에 제작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포르노 시청이 곧 강간을 낳진 않는다. 포르노의 대부분이 성차별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포르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을 저지르진 않는다. 포르노는 강간의 원인이 아니라, 성이 상품이 된 극단적 성의 소외가 낳은 결과물이다.

사형 같은 극형조차 범죄발생을 감소와 별 관계가 없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과 2002년 광범한 조사를 거쳐 사형제가 반인륜적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이후 10년(1998~2007년) 동안 살인범죄는 16퍼센트 증가한 데 비해, 사형집행이 빈번했던 1988~1997년까지 10년 동안 살인범죄 증가율은 무려 31퍼센트였다.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 재개 운운한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살인 범죄 증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부가 내놓은 처벌 강화 정책들은 잘못된 가정을 전제하고, 성범죄의 실상을 과장하기 때문에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우선, 성범죄 신고율이 낮아 정확한 실태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간이나 강간시도 등을 저지르는 사람은 여전히 전체 인구 중 소수(2008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0.47퍼센트)라고, 아동 대상 성폭력은 훨씬 더 극소수다. 따라서 이런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넘쳐나고 우리 아이를 노리고 있다는 식의 얘기는 대중의 공포심을 부추기기 위해 과장된 것이다.

각종 가해자 격리 정책들은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매년 미국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87퍼센트가 성범죄 전력자 없는 사람들이 저지른다고 지적한다.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분석 결과를 봐도, 성폭력 범죄자의 50퍼센트가 재범자인데 그중 14퍼센트만이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동종 재범자였다. 이것은 1997~2006년 10년간 전체 범죄의 동종재범률(30~35퍼센트 내외)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다.

또, 대부분의 성범죄 대책들은 성범죄가 주로 낮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덮치는 것이라는 가정 위에 나온 것이 많다. 그러나 성범죄의 압도 다수는 아는 사람에 의해 벌어진다. 2010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분석에 따르면, 가해자가 아

는 사람인 경우가 85퍼센트를 차지했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피해 중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것은 5퍼센트가량밖에 되지 않았다.

사실, 성범죄 처벌 강화의 진정한 목적은 탄 곳에 있다.

2009년에 용산참사 항의 운동이 계속되자 정부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 때만 되면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며 더 센 처벌을 부르짖었다.

얼마 전 박근혜가 나주 사건을 빌미로 1백 일 동안의 ‘범국민 특별안전 확립기간’ 운운한 것도 대선을 1백 일가량 앞둔 시점에 사회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려는 의도와 관련 있을 것이다.

흉악범죄에 대한 공포심 조장은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감시제도 강화는 경찰력 증강의 구실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배자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쉽게 이용된다.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성 의식은 왜곡되기 마련이다.

자본주의는 가족, 특히 가족 내의 여성에게 노동력을 돌보는 일을 전가해 왔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전례 없이 많이 사회에 진출했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남성의 부속물로 취급받고 어머니·아내로서 가족에 헌신할 것을 요구받는다. 자본가들은 이런 차별을 통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여성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한다.

이런 체계적 차별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는 이 밖에도 수많은 차별과 소외가 있다. 소수의 부자와 권력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기 어렵다.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이 강요되고, 이 경쟁의 도가니에서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 병든 체제 속에서는 자긍심 없고 가난에 찌들리고 복수심으로 가득찬 사람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형수의 압도 다수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가난과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다. 사형수 대부분이 돈이나 복수심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국민일보, ‘사형수 63인 심층 리포트’).

따라서 범죄를 몇몇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범죄의 사회적 토대에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뉴질랜드와 캐나다 교정 당국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자존감 형성 프로그램 등 재활 교육에 체계적인 투자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복지도 대폭 확충돼야 한다. 이번 나주 사건의 가해자도 직업 없이 피씨방을 전전하던 사람이었다. 복지 확충은 빈곤과 소외를 줄여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아동에 대한 복지도 늘려야 한다. 최근 벌어진 아동 성폭력 사건들은 가난한 마을에서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조건에서 벌어졌다.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

설에 투자했다면 이런 비극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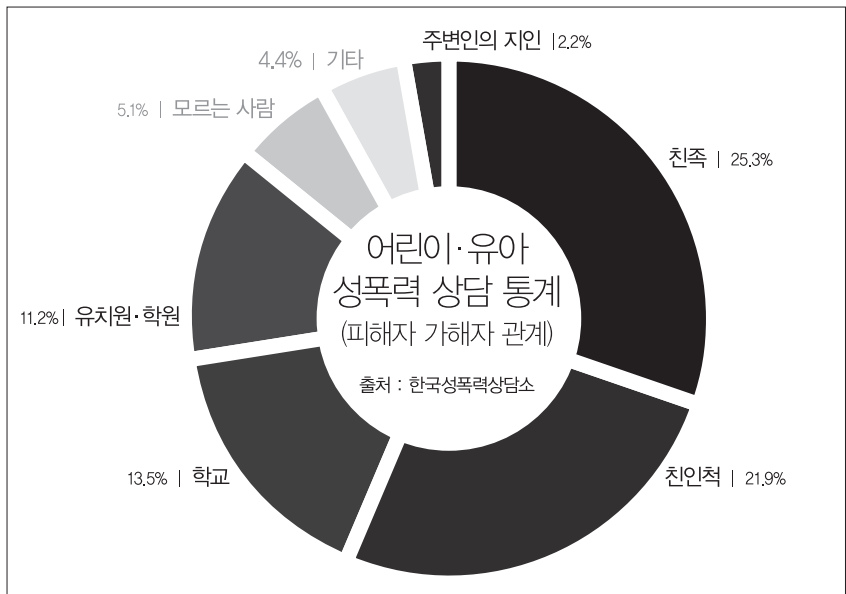
정부는 가해자 격리에는 돈을 쏟아 붓지만, 정작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예산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성폭력 피해자 쉼터의 1인당 지원금은 한 달에 13만 원밖에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범죄자 치료 재활 예산, 아동 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등은 오히려 삭감됐다.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언론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파헤치다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지만 금방 폐기처분하곤 하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전쟁, 경찰력 강화 등에 낭비되는 돈을 복지로 돌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범죄를 낳는 사회적 조건, 즉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빈곤과 박탈감을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해야 한다.

▶ 관련기사 7면



성폭력의 압도다수는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낮선 성행수가 총동적으로 뒤흔든다’는 가정 하에 나오는 대책들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슬릿워크’ 시위 “무슨 옷을 입든 어디에 가든 여성의 NO는 NO다!”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럽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곤 한다. 또,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강간이나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데이트 강간은 강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여성의 NO는 YES’라는 편견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여성의 의사가 아니라, 여성의 옷차림, 음주 여부, 성관계 전력, 상대 남성과의 친분, 여성이 얼마나 저항했는가 등 여성의 ‘행실’이 판결에 중요한 요소다. 피해 여성이 죽을 만큼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받기 힘들며, 오히려 여성이 ‘괴리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받곤 한다.

가령, 2008년 ‘청바지 판결 사건’에서 재판부는 ‘청바지는 벗기기 어렵다, 피해자가 우울증 전력이 있다, 저항을 입증할 만한 상해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간 시도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피해 여성은 강간을 피하려고 6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말이다.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당시에도 경찰은 피해 여학생에게 되레 “밀양 물을 흐려 놔다”고 비난했다. 고려대 의대생 세 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원래 문란한 여자’라는 가해자 부모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관행 때문에 성폭력 신고율과 기소율은 매우 낮다.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 강간미수 피해 신고율은 12.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렵게 신고해도 기소율과 실행 선고율이 낮아 여성들은 또 한번 좌절한다. 2011년에 대검찰청이 밝힌 지난 5년간 기소율은 47.5퍼센트고, 이 중에서 징역형의 실행 선고율은 28퍼센트밖에 안 된다. 신고율이 10퍼센트라는 가정 하에 계산해 보면 전체 성폭력 사건 중 실행 선고 비율은 1.33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처럼 국가권력은 성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해 왔다. 게다가 권력자들 자신이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수를 일삼아 왔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근래 제기되는 여러가지 성범죄 근절 방안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성폭력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 폐지도 포함돼 있다.

사실, 친고죄 폐지는 여성운동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다.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생겼지만, 실제로는 가해자 처벌의 책임과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구실을 해 왔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과 합의 시도에 시달리고, 오히려 ‘참고 넘어갈 일을 괜히 걸고 넘어진다’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합의할 경우에도 합의금을 노린 ‘꽃뱀’ 취급받기 일쑤다. 게다가 피해자는 1년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권을 잃는다.

이것은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사소한 개인적 일로 취급하는 경향을 낳았고, 성범죄를 신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보

편적인 것도 아니다. 중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고, 미국 다수 주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만이 친고죄다.

다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길 원치 않을 수 있다. 이때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피의자나 주변인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금지하거나, 재판 기록을 열람할 때 피해자의 자세한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친고죄를 폐지해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고율과 처벌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 맞서 계속 싸워야 할 것이다.

마리카나 학살 이후

남아공 전국에 파업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켄 올렌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파업 중인 마리카나 백금 광산 노동자 약 4천 명이 9월 10일 중무장한 경찰과 충돌했다.

노동자들은 “백인들은 지금 떨고 있다! 우리를 쏜 경찰들은 떨고 있다!” 하고 연신 외치며 경찰에 맞섰다.

사측과 대표 교섭 노조인 전국광원노조(NUM)가 합의했음에도 마리카나 광산 파업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재 파업 중인 광원들은 경쟁 노조인 광원건설노조연합(AMCU) 소속이다. AMCU는 그동안 협상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마리카나 광산의 파업 노동자 34명을 무참하게 쏜 죽였다. 노동자 대표인 톨라켈레 들랑가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산 사주들이 돈을 올려주지 않는 한 복귀하지 않을 겁니다.”

한편 남아공 전역의 광산으로 분쟁이 번지고 있다. KDC 이스트 금광의 노동자 1만 2천 명이 8월 말에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가운데 하나는 NUM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측이 9월 초에 간신히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웠지만, 9월 9일에 노동자

1만 5천 명이 곧바로 새로운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임플라츠 백금 광산의 노동자 1만 5천 명도 10퍼센트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파업도 불사할 태세다.

과거 NUM의 급진적 지도자였던 시릴 라마포사는 “[마리카나 학살이] 아마도 민주화 이후 남아공 역사에서 최악의 순간이었다” 하고 썼다.

백만장자

라마포사는 지금 마리카나 광산을 소유한 론민의 이사회 임원이고 백만장자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ANC 정권의 지도적 인물이다. 마리카나 파업과 학살은 ANC 정권을 위기에 빠뜨리고 점점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도 점차 ANC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고 다시는 그들한테 투표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인 삼켈레 음팜파니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ANC에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 노동자를 죽인 자들입니다. 나는 더는 ANC가 우리를 대변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이콥 주마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끝장났어요.”

또 다른 파업 노동자 파세카 라모세베치는 ANC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돈만 밝히고 으리으리한 집과 비싼 차를 가지고 싶어 할 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나 몰라라 합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9월 5일에도 분노한 마리카나 광산 노동자 3천 명이 사측의 탄압에 맞서며 광산으로 행진했다. 노동자들은 저마다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지난달에 경찰한테 죽임을 당한 동료들의 초상화도 들었다.

노동자들이 마을을 지날 때는 주민들도 모두 거리에 나와 노동자들을 응원했다. 경찰은 중무장한 경찰 차량으로 행진 대열을 뒤따르며 감시했다.

폴리처상 수상자인 그렉 마리노비치는 최근 남아공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숨진 노동자들 대다수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거나 숨다가 총에 맞았다고 확인해 줬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톱기실레 루츠세투는 마리노비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언덕 쪽으로 서둘러 피했고, 그 곳에서 큰 바위들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은 경찰들 천지였습니다.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의 근접 사격에 맞아 잇달아 쓰러졌고, 나는 그 사람들 밑에 깔렸습니다. 내가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지요.”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0호 / 번역 정중수

미국 시카고 교사 파업

거대한 투쟁이 계속 분출하고 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시카고에서, 교사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년 만에 파업을 벌이고 거리를 가득 메웠다.

9월 10일에 찬성률 98퍼센트로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 2만 6천여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민주당원인 시카고 시장 람 임마누엘에 맞선 노동자들은 고용계약 준수, 노동조합 탄압 시도 중단, 교사들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해고를 쉽게 하는 교원평가제 반대 등의 요구를 걸고 싸우고 있다.

이번 파업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이다. ‘노동조합의 도시’로 불리지만 교사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피켓 라인을 만든 것이 25년 만인데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수천 명이 거리

시위에 함께하고 있다.

롭니는 “교원노조가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다”며 파업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오바마는 자신이 ‘(교원 노동자 편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편’이라고 주장하며 파업과 거리를 두고 있다. 노동자 투쟁이라는 시험대 위에서 둘 사이의 계급적 공통점이 드러난 것이다.

계급적

하지만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99퍼센트’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미 시카고의 학생·학부모 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파업에 연대하며 지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제 단체들의 연대성명도 줄을 잇고 있다. 해고를 쉽게 하는

조처들에 맞서 노동조합 탄압을 분쇄하려 한다는 점에서도 이 투쟁은 모든 노동자 계급을 위한 투쟁이다.

시카고 교원노조 소속 교사 조합원은 파업이 성장하는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노동자의 날] 행진에 참여했던 제 동료는 이제 전환점이 왔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더는 혼자 아니라고 느낀 거죠.”

지난해 초 위스콘신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 수만 명이 주의회를 점거한 데서 시작한 반란이, ‘점거하라’ 운동으로 탄력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미국의 운동은 계속 성장할 조짐이 보인다.

김준효
▶ 관련기사 9면



깨어나고 있는 잠자던 거인 9월 10일 시카고 교사 노동자들이 파업 행진을 벌이고 있다.

리비아 미 대사 피습과 확대되는 반미 시위

수십 년간 쌓여 온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9월 11일, 리비아 벤가지에서 무장한 시위대가 미국 영사관을 공격해 미 대사를 포함한 외교관 4명이 죽었다. 이집트와 예멘, 수단, 튀니지에서는 성난 시위대가 미 대사관에 진해해서 성조기를 끌어내리고 불태웠고, 수단에서는 영국과 독일 대사관들도 공격을 받지 못했다.

9월 14일 현재까지 예멘에서는 유엔 다국적 평화유지군 캠프도 공격을 받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 지구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했다. 레바논에서는 교황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이 밖에도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카타르, 모로코, 인도령 카슈미르, 방글라데시 등 지난해 혁명이 일어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슬람 국가 전역으로 반미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이 제작했다고 알려진 이슬람 혐오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에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동영상은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돈에 미친 성도착자이고, 아동을 노예로 팔았으며, 이슬람 경전인 쿠란은 기독교 신약성서와 유대교의 토라를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비하한다. 동영상 제작자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이슬람을 암영아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런 쓰레기 영화가 나온 배경에는 그동안 서방 지배자들이 부추겨 온 이슬람 혐오증이 있다. 중동 민중을 멸시하고 제국주의적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방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슬람을 파에 붙주려고 여성차별적인 종교로 묘사해 왔다. 특히 미국은 자신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정당화하려고 이슬람 혐오를 부추겨 왔다.

따라서 이번 리비아 영사관 공격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사과하기를 커녕 ‘정의의 심판’을 운운하며 해병대 50명과 토마호크 미사일을 실은 군함 2척을 리비아로 급파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사용한 미사일로 1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폭격을 가할 수 있다. 벌써부터 미국 관료들은 리비아 영사관 공격이 ‘알카에다’와 연계된 집단인 ‘게릴라 테러’라는 추측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들은 또한 반미 시위가 확대되는 것도 이슬람주의 정파나 세력인 선동 때문이라고 묘사한다. 미국은 아랍 혁명을 지지해 왔는데 이슬람주의 테러리스트 세력이 이간질하며 든다는 것이다. 힐러리는 “미국이 자유로워지도록 돕고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 주기까지 한 도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소나까”라면서 되려 리비아 민중을 타락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이처럼 황당하고 역겨운 헛소문도 없다. 사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이슬람 혐오와 미 제국주의 때문에 상처와 고통을 받아 온 이 지역 민중이다.

미국은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등에서 부패한 독재 정부나 왕정을 후원하며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었고 그들이 민주주의를 삼입하고 빈곤을 양산하도록 했다. 리비아, 예멘, 수단, 이라크 등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거나 단순히 미국이 군사력을 과시해야 했기 때문에 미국이 폭력을 받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경제 봉쇄에 시달리거나 신자유주의 개방을 수용해야 했다.

리비아와 다른 나라들의 반미 시위는 이런 미 제국주의를 향해 쌓여 있던 대중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민중들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혁명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어 행동에 나섰다. 그래서 오바마가 리비아 대사를 살해된 것을 빌미로 ‘정의의 심판’을 운운하며 협박했지만 반미 시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아랍 혁명이 반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다. 지난해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혁명으로 미국이 지원했던 독재 정권들이 무너졌을 때부터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력은 위협 받아왔다. 그래서 미국은 아랍 혁명을 지지한다고 입발림 소리를 하면서도 혁명의 기운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지난해 카다피 정권의 학살을 구실 삼아 나토를 앞세워 리비아 혁명에 개입했다.

도둑질

이 과정에서 전투기 폭격으로 수많은 리비아 국민들이 죽었지만, 카다피 시절의 부역자들과 서방의 꼭두각시들이 리비아 혁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리비아 혁명을 시작한 저항군은 나토가 혁명을 ‘도둑질’해 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랍 혁명의 기운을 차단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리비아에서도 반미 시위가 불거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특히 미국 영사관 공격이 벌어진 벤가지가 리비아 혁명 당시 카다피에 맞선 저항의 중심지였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따라서 미국이 개입한다면 그것은 아랍 혁명의 잠재력을 무력화시키고 아랍 민중을 학살하면서 오로지 석유와 제국주의 패권을 위한 범죄가 될 것이다. 우리는 리비아 대사의 죽음을 빌미로 미국이 중동에서 정치적·군사적 개입을 늘리려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아랍 민중의 제국주의에 맞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이집트이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공업국이자 지역의 맹주로서 미국의 중동 지배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아랍 혁명의 결과로 미국이 후원했던 독재자 무바라크가 쫓겨 나고 이슬람주의 정당인 무슬림형제단이 집권당이 됐다.

권력을 잡은 무슬림형제단은 아랍 혁명과 제국주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 왔다. 무바라크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권력 기반이었던 군부와는 타협했고, 이집트 민중의 가난을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IMF로부터 더 많은 차관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무슬림형제단은 미국에게 이슬람 모독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반미 시위가 성장하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은 무바라크를 끌어 낸 대중운동의 눈치를 보면서, 자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세력에게 자신은 결코 급진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는 교화에서 코란 사본을 태워 무슬림들을 격분케 한 자다.

그러나 서방에서 이슬람 혐오증은 비단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나 극소수 극우파들만이 퍼뜨리는 게 아니다. 오늘날 서방 지배자들이아랍로 적극적으로 이슬람 혐오증을 조장하는 주범



9월 11일 이집트 미 대사관에 진해해서 성조기를 끌어내리는 시위대

서방 지배자들의 무기 — 이슬람 혐오증

리비아, 이집트 등지에서 무슬림의 분노를 일으킨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의 내용은 온통 이슬람과 무슬림을 모욕하는 내용이다. 말하더라도 IMF로부터 더 많은 차관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무슬림형제단은 미국에게 이슬람 모독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반미 시위가 성장하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은 무바라크를 끌어 낸 대중운동의 눈치를 보면서, 자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세력에게 자신은 결코 급진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는 교화에서 코란 사본을 태워 무슬림들을 격분케 한 자다.

그러나 서방에서 이슬람 혐오증은 비단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나 극소수 극우파들만이 퍼뜨리는 게 아니다. 오늘날 서방 지배자들이아랍로 적극

이다. 할리우드 영화들은 ‘무슬림 = 테러리스트’라는 공식을 유포시켰고, 미국 주류 언론들은 아랍인과 무슬림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며 아랍인과 무슬림의 모국을 짓밟는 것을 지지해 왔다. 조지 부시는 공개적으로 이슬람을 파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관용을 자랑한다는 유럽 지배자들도 이슬람을 비합리적이고 후진적인 문화로 낙인찍기는 마찬가지다. 프랑스 지배자들은 ‘국가 정체성 확립을 내세우며 국내 무슬림 여성들의 배일 착용을 금지했다.

낙인찍기

이처럼 서방 지배자들이 이슬람 혐오증을 퍼뜨리는 것은 자신들의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2000년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고, 유럽의 지배자들도 이에 협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가 시작한 ‘테러

와의 전쟁’을 계승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수많은 무슬림을 학살하고 있다. 침략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포를 부추기며 아랍인과 무슬림의 모국을 짓밟는 것을 지지해 왔다. 조지 부시는 공개적으로 이슬람을 파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관용을 자랑한다는 유럽 지배자들도 이슬람을 비합리적이고 후진적인 문화로 낙인찍기는 마찬가지다. 프랑스 지배자들은 ‘국가 정체성 확립을 내세우며 국내 무슬림 여성들의 배일 착용을 금지했다.

이처럼 서방 지배자들이 이슬람 혐오증을 퍼뜨리는 것은 자신들의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2000년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고, 유럽의 지배자들도 이에 협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가 시작한 ‘테러

김영익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최악과 차악 뒤에 있는 것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들어갔다.

오바마의 카드는 4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는 자신이 ‘99퍼센트’의 수호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중단 등 4년 전 공약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눈길을 끄는 공약은 ‘부자 감세 중단’이다. 소득 상위 1퍼센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해제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미 2년 전에 부자 감세를 중단할 기회가 있었다. 애초에 이 감세 법안의 만기는 2010년이었는데, 오바마 자신이 2년을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게다가 법안 만기 연장을 중단한다고 해도 부유층의 세금이 고작 4퍼센트 오를 뿐이다.

사정이 이러니, 많은 미국인들이 오바마에게 4년 전만큼 뜨거운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집권 초 80퍼센트의 지지를 받던 대통령이 재선을 걱정할 상황인 것이다.

〈한겨레〉는 오바마를 대선 후보로 추대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인종과 성지향의 다양성이 충만했던 “무지개빛 축제”였다며, 오바마를 지지하는 것이 ‘99퍼센트’를 위한 일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오바마의 4년은 ‘1퍼센트’에 맞서는 4년은 아니었다. ‘1퍼센트’와 타협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4년이었다. 그럼에도 오바마가 근소하게나마 우위에 있는 것은, 롬니의 공화당이 얼마나 불신받는지를 보여 준다. 노동자를 정리해고해 수천억 원을 챙긴 사모펀드 재벌 롬니의 말이 노동자들에게 순순히 먹힐 리가 없다.

롬니의 슬로건은 ‘강한 미국’에, 소득 상위 1퍼센트에 대한 소득세를 현행 3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내리겠다고 하고, 의료보험을 전면 민영화하겠다고 하는데, 불법 이민자 단속을 무할식 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주리 주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토드 아킨스가 ‘강간을 당한 여성은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예외 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정신 나간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다. 사실 이것은 롬니의 선거 공약이다.

기독교 근본주의 우익을 포함한다 해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 기껏해야 3분



올해 미국 반전 집회. 오바마와 롬니 모두 제국주의·친기업 정책을 지지하는 1퍼센트의 대변자다.

의 1 정도만이 롬니를 지지하겠지만 옛 오바마 지지자들이 실망 때문에 투표에 대거 불참할 것이라는 것에 공화당은 경정할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롬니가 극렬 보수 풀라언을 러닝메이트로 삼은 이유다. 원래 갖고 있던 우익 지지층이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통점

그러나 롬니와 오바마 사이의 거리는, 그들이 서로 비난을 퍼붓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훨씬 가깝다. 롬니와 오바마 모두 태평양에서 미국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옹호하며,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이란과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하는 것도 똑같다.

오바마는 선거 운동 때부터 이런 과제들을 자기가 롬니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바마가 파키스탄에서 벌이는 드론(무인전투기) 전쟁이나, “인도적 개입” 운운하며 리비아에서 벌인 공중전 등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실로, 오바마와 롬니는 여러 모로 공통점이 많다. 둘 모두 미국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공격해 미국 기업이 세계에서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한쪽은 포퓰리즘적 언사를 하고 다른 한쪽은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말이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진보·개혁 세

력 일부는 이 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008년에도 ‘오바마를 위한 진보’라는 단체를 만들어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한 주요 노조 지도자 일부는 이번에도 오바마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바마의 전쟁 수행과 독 마이를 무어든 롬니 낙선을 위해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두 가지 전통〉(노동자연대다함께)의 저자인 미국 사회주의자 헬 드레이베는 미국 양당 체제를 두고 “차악을 찍는다고 최악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평한 바 있다.

1964년 미국 대선에서도 전쟁광이자 매카시즘의 선봉장이었던 공화당 후보 배리 골드워터를 낙선시키려고 민주당의 “평화 후보” 린든 존슨에게 투표했지만, 결국 린든 존슨 자신이 공화당과 손잡고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고야 말았다

그림의 한 편에는 수십 년 동안 ‘미워도 다시 한 편’의 심정으로 민주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온 주류 양당이 있다. 그리고 그림의 다른 편에는 위스콘신 주의회 정거, ‘점거하라’ 운동, 인종차별 반대를 외친 수십만 명의 샬 시위 등 급격히 성장하는 투쟁이 있다. 미국의 진보 운동은 전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후자를 더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김준효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9월 16~27일 이란 오바다 결판에서 미국을 포함해 2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뢰 제거 훈련이 열린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훈련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결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훈련이 이란에 군사적 위협과 협박을 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뻔하다.

한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지난 10여 년 동안 경험한 군사적 실패를 만회하려 한다.

물론 테러나후 정부는 이스라엘 국내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기도 할 것이다. 네타냐후가 지금 이란 공격 위협을 강화하는 데에는 미국 대선을 이용하겠다는 배경도 있다. 네타냐후는 오바마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든, 롬니가 당선하든 좋다는 입장이다.

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기도 할 것이다.

네타냐후가 지금 이란 공격 위협을 강화하는 데에는 미국 대선을 이용하겠다는 배경도 있다. 네타냐후는 오바마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든, 롬니가 당선하든 좋다는 입장이다.

실제 만화하기

물론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 온 롬니의 당성을 더 바라는 것은 사실이다. 네타냐후와 롬니는 36년 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기업 자문으로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

미국의 처치에서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 강화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2011년 이후 아랍 혁명으로 중동

지배 전략의 축이 흔들리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동아시아 개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즉각적 공격은 반대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당장 미국의 도움 없이 혼자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부담이다. 2006년 레바논을 침공했지만 본전도 못 찾은 것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매우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랍 항쟁은 주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고, 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랍 항쟁은 지난 2년 동안 이런 제국주의 열강과 이스라엘, 각국 독재자들이 아랍 민중의 삶을 유린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을 보여 줬다.



공산당 인사

2006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강행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는 결국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일들에 적극 나섰다. 이런 전략과 세력에 의지해선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

계속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불안정

균형외교가 평화를 보장해 줄까

김영익

다오위다오, 난사군도 등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보면서, 새삼 동아시아가 얼마나 불안정한 지역인지를 실감한다.

이런 영유권 다툼은 바로 중국, 미국 제국주의 등이 벌이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의 일부다. 그리고 이런 제국주의적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와중에,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보인 행태는 정말 우려스럽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천안함 사태, 연평도 상호 포격, 다오위다오 분쟁 등이 벌어질 때마다 기존 동맹국들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으로 더 강하게 묶으려 애썼다.

이명박 정권은 이에 협조해 왔다. 서해에서 일련의 한미 합동군사훈련들을 실시했고, 한일 군사협정까지 체결하려 했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MD 체제 구축에 협조하며 MD 체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권은 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려는 등 군비 증강에도 열을 올렸다.

이명박 정권의 한미동맹 강화, 군비 증강이 중국 지배자들을 자극했음은 물론이다. 즉, 이명박은 ‘불난 집에 부채질’해 온 셈이다.

이에 대한 반발 속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한겨레>는 “갈등하는 두 거인 사이에서 ... 어느 때보다 입체적이고 균형있는 외교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촉구한다.

이런 주장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등장한 바 있다.

심지어 일부 보수파들도 “연미화중(聯美和中)”, 즉 변화한 정세에 맞게 미국과의 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중국과도 화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는다. ‘뻥속까지 친미’라는 새누리당이 올해 초 새로운 정강·정책에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를 넣기도 했다.

이는 탈냉전 이후 20여 년 동안 동아시아의 경제적·정치적 관계가 일정하게 변해 왔음을 보여 준다.

2000년대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커졌고,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외화 획득 원천과 시장으로서 미국의 구실을 대체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배자들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중국을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두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일본 하토야마 정권의 “아시아 중시 외교”가 나왔던 것이다.

“아시아 중시”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경험에서 드러나듯이, 지금의 균형외교론자들도 결국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친미적 자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균형자 구실을 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 친미 노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오죽하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이었던 마이클 그린이 “한미동맹에 대한 그[노무현]의 기여는 전두환, 노태우 이상”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한국 지배자들의 처지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통상 규모로만 따질 수 없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고, 달러는 여전히 기축 통화며, 미국은 전 세계 군비의 절반을 차지한다. 노무현 정부도 결국 이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설사 다자안보체제를 지향한다고 해도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중국, 일본 등 이 지역의 열강들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군사력 사용도 마다하지 않는다. 즉, 이들도 동아시아를 불안정에 빠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러시아 혁명이 레닌이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각 국민국가의 발전 정도는 불균등하고, 자본주의의 역동적 발전 과정 자체가 이런 불균등의 분포를 수시로 바꿔 버린다. 이

것이 제국주의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변하게 하고, 이들 간에 쟁투와 갈등이 일어나게 한다. 즉,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열강들의 협력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균형론에는, 열강들의 각축전 속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임동원·이종석·정세현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반도평화포럼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한국의 국방비가 2배로 증가했다”며 강력한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것이 동아시아 불안정에 한국도 제대로 한몫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 이미 한국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군비 증강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그러므로 균형외교론은 어떤 의미에서든 평화를 위한 진보의 노선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에서 살아남아 제 몫을 챙기려는 한국 지배자들의 고민을 보여 줄 뿐이다.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과 동맹을 가

깝게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고도 성장에서 이익을 얻는 ‘균형’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로 국가들 간에 경쟁적 성격이 점차 강해지면서 모순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진영은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균형외교와는 다른 독립적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려는 지배자들의 외교 전략에 기멸 게 아니라, 반제국주의적인 국제 연대를 건설해 진정한 평화를 쟁취해야 한다.

일본 도쿄와 오키나와에서 미군 신형 군용기 ‘오스프리’ 배치에 반대해 10만여 명이 시위에 나선 것이나 홍콩에서 중국 지배 체제를 옹호한 국민교육 도입에 반대하는 12만 명의 시위대가 보여 주듯이, 점증하는 위기에 맞서 희망도 싹트고 있다.

이런 운동이 각국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국제적 연대가 구축된다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지배자들을 패퇴시킬 진정한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늘려야 할 것은 군비가 아니라 복지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마지막 해까지 호전적인 군사 정책을 추진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8월 29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 계획을 내놴다. 핵심 내용은 군 병력을 52만 2천 명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전투 위주의 군을 만들기 위해 산악여단, 잠수함사령부 등을 창설하고 신무기로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평상시에도 기존의 ‘억제’에서 ‘적극적 억제’로 군사전략을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종 무기를 도입·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 계획을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에만 1백99조 원이 넘

는 돈이 필요하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돈이 없다고 지자체 등에 떠넘기면서 말이다.

북한군과 교전이 자주 벌어진 서북도서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공세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연평도 상호 포격 사태 같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울 것이다.

통합

한편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폭로한 ‘제주 해군기지 실시 설계 보고서’를 보면, 제주 해군기지가 주한미군이 요구한 수심에 맞게 설계돼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의 입항이 가능하게 건설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건설될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동아시아 MD의 중간 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9월 9일 ‘오스프리 배치 반대 오키나와 현민대회’

“아름다운 하늘에 군용기는 필요 없다”

지난 9일, 일본 오키나와 후텐바 미군기지에 미군 신형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가 배치되는 것에 반대해 10만 1천여 명이 붉은색 옷을 맞춰 입고 반미군기지·반오스프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오키나와 주민뿐 아니라 ‘본토’에서 연대하러 온 학생들도 눈에 띄었고, 특히 노동조합들이 많이 참가해 전체 대열의 반수를 이뤘다.

오스프리는 계속되는 추락 사고 등으로 미국 <타임>지로부터 ‘하늘을 나는 불명예(A Flying Shame)’라는 별명을 얻었다. 미군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58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미망인 제조기’로 불리기도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하와이에서는 소음, 안정성,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비행이 중지됐다”며 “주일 미군의 74퍼센트가 집중해 있는 오키나와에 위험천만한 오스프리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현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무시한 비민주적 행태”라며 미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오스프리 배치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며 자국민의 생명보다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노다 정권에 대해서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집회에 불참한 오키나와 현 지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배치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많은 참가자들이 야유를 보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시위대의 분노는 단지 ‘안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 시위는 미국과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들의 전쟁 놀이에 희생돼 온 일본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데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시위대가 반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원전도 오스프리도 필요 없다”

후텐바 기지에 오스프리를 배치하려는 계획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견제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편승하려는 일본의 보수강경파 세력이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프리는 다오위다오 섬들을 중국이 무력 점거할 경우 이를 타격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군국주의 강화에 반대하는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일본의 대중적 반핵운동도 이번 대규모 반미군기지·반오스프리 시위에 영감을 줬을 것이다.

“반원전 20만 명 시위와 연대해 오스프리 배치를 반드시 저지하자”, “원전도 미군기지도 근본에서는 같다”, “우리도 후쿠시마와 한마음”이라는 시위 참가자들의 말처럼 지금 일본의 운동은 서로 갈라뿔며 발전하고 있다.

같은 날, 일본 각지에서 오키나와 시위에 연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도쿄에서 열린 ‘9·9 오키나와 현민대회’ 동시 행동에는 1만 1천여 명이 모여 국회를 포위했다. 이미 오스프리 12기가 임시 배치돼 있는 이와쿠니 시에서도 “원전도 오스프리도 필요없다”, “안보를 빙자한 살인을 멈춰라”, “남서제도[다오위다오·오키나와 등을 포함한 일본 남서쪽 섬들]를 지배하지 말라”는 구호와 함께 ‘9·9 오키나와 연대, 함께기도 오스프리도 필요없다! 이와쿠니 집회’가 열렸다.

최미선

강신준 교수의 《자본론》 연재 칼럼

《자본론》에 담긴 혁명적 취지가 빠져 있다

최용찬 (중비 자본주의)(크리스 지음, 책갈피) 공역자, 경성대 정치경제학과 박사 과정

“오늘 ‘자본’을 읽다”라는 강신준 교수의 연재칼럼이 《경향신문》에 실리고 있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세계경제 위기를 설명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이 끔찍한 세상에 대해 의문을 갖고 또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마르크스의 《자본론》만큼 훌륭한 무기는 없다. 그 점에서 이 칼럼 연재 소식은 반가운 일이었다.

이 연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와 《자본론》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강신준 교수가 지금까지 쓴 칼럼은 안타깝게도 실망스럽다.

이 칼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신준 교수가 자기 자신의 주장이 마치 마르크스의 주장인 것처럼 왜곡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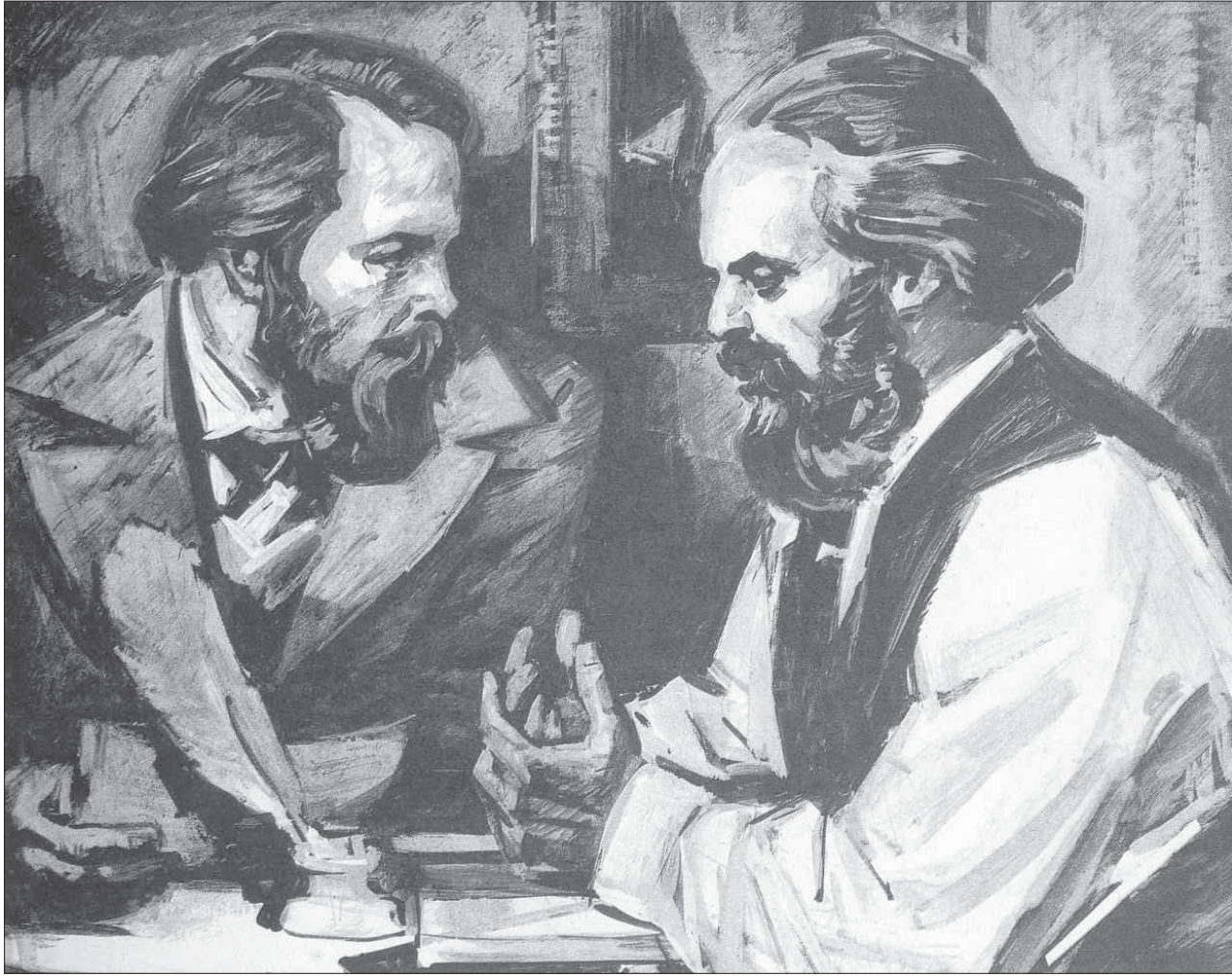
강신준 교수는 먼저 자신은 마르크스와 같은 혁명가가 아니라 개혁주의자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애쓴다. 이것은 그의 자유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고백을 위해 마르크스를 왜곡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의 칼럼에서 주장한 수많은 내용들을 낱낱이 반박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의 변증법과 유물론에 대한 조야한 이해와 주장이 마르크스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본론》 내용으로 논박하겠다.

강신준 교수는 그의 두 번째 칼럼에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사용한 방법론인 변증법을 설명하며 “1+1=2”이고 “1은 성숙해 지며 2”가 되고 “기존의 1을 없애버리면 새롭게 추가하는 1밖에 남지” 않으므로 “도로아미타불의 제자리걸음”이 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개혁은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위에 건설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강신준 교수가 변증법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그런데 강신준 교수가 칼럼에서 마르크스의 설명이라고 엉뚱하게 인용한 러시아 경제학자 카우프만은 《자본론》의 변증법에 대한 논문에서 “[마르크스와 달리] 종래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법칙을 물리학·화학의 법칙과 동일시함으로써 경제 법칙의 성질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한다.

사실 물리학·화학에서조차 ‘1+1=2’가 아니다. 방향을 가진 힘 1과 또 다른



평생 동지 엥겔스와 대화하는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혁명가로서 노동계급의 승리와 자본주의의 철폐를 위해 헌신했다. 마르크스의 주장을 개혁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의 생애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자본론》은 혁명을 위한
투사들에게 유용한,
자본주의의 비밀을 파헤치고
분석한 책이다.

힘 1은 방향에 따라 0일 수도 2일 수도 있다. 화학에서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생명의 물이 되지만 산소와 탄소가 더해지면 독가스 일산화탄소가 된다.

강신준 교수의 산수는 경제 법칙과 사회 법칙은커녕 물리학과 화학에도 적용될 수 없는 조야한 것으로 변증법이 아니다. 그런데 강신준 교수는 이런 조야한 주장이 마르크스의 변증법이라고 강변한다. 그는 마르크스가 “변증법은 현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인용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인용은 마르크스가 말한 진정한 취지와 어긋난다.

변증법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서문의 해당 문단은 이렇게 시작한다. “변증법은 그 신비로운 형태로 독일에서 유행했다. 왜냐하면, 변증법이 현존하는 것을 찬미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증법은 … 부르주아지와 그 이론적 대변자들에게 분노와 공포를 줄 뿐이다.” 이제 강신

준 교수가 인용한 부분이 이어진다. “변증법은 현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부정, 즉 그것의 불가피한 파멸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문단 마지막은 변증법이 현존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강신준 교수 같은 이들을 향해 벼락 같은 선언을 하며 끝난다. “일반적 공황은 비록 아직은 그 초기 단계에 있지만 또다시 박두하고 있으며 … 신성 프러시아-독일제국의 졸부들의 머릿속까지 변증법을 새겨 넣을 것이다.”

세 번째 칼럼은 유물론에 관한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유물론이란 “의지를 지배하는 필연의 자연법칙이 인간과 사회라는 유기체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사회의 개혁은 이런 필연적 법칙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 체제도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야 성립될 수 있다”며 이전의 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서문 첫 문장에서

《자본론》이 이전에 발표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의 계속이라고 밝혔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썼다. “한 사회구성체는 그 내부에서 발전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기 전에는 멸망하지 않으며, 새로운 보다 높은 생산관계는 그들의 물적 존재 조건들이 낡은 사회 자체의 품에서 부화되기 전에는 결코 대신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강신준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로 이어 마르크스는 이렇게 썼다. “따라서 인류는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과업만을 제기한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과업 자체가 그 해결의 물적 제조건이 이미 주어져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생성 과정에 처해 있는 곳에서만 출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차례의 피비린내 나는 세계 전쟁과 두 번째 경제대공황을 경험하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곤 사파가 익어가듯 자본주의가 더 충분히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일인가?

사실 지금의 자본주의는 당장에 사회주의로 바뀌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성숙’했고, 대중의 삶과 창조적 의욕을 억제할 만큼 노쇠했다. 《자본론》은 혁명을 위한 투사들에게 유용한, 자본주의의 비밀을 파헤치고 분석한 책이다.

강신준 교수와 같이 《자본론》을 개혁주의 시각에서 독해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카우츠키 이후 사민주의자들에 의해 계속돼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주의적 《자본론》 독해는 2007~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반 자본주의 운동이 고양되면서 조종동조차 “마르크스 르네상스”를 운운하고 있는 현재의 정세와 들어맞지 않는다. 시대정신에 한참 뒤떨어진 독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사상을 왜곡하는 이들을 향해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물론 강신준 교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몇 년 전 《조선일보》조차 계급투쟁이나 혁명을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면 마르크스 경제학자가 서울대 교수를 해도 좋겠다고 썼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마르크스 경제학자라도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담긴 혁명적 취지는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용광로 사고 재발

무엇이 두 노동자를 1천2백 도의 쇳물 속으로 사라지게 했는가

광온(狂溫)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빚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계.



2010년, 한 네티즌이 작업 중에 용광로로 떨어져 죽은 청년을 위해 지은 시다. 당시 사고가 난 작업장은 연 매출 2조 원이 넘는 한국철강그룹의 계열사인 환영철강이었고, 환영철강도 자체 매출이 4천7백억 원이 넘는 흑자 기업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고는 10만 원짜리 펜스 하나 설치하지 못 해 일어난 일이었다.

2012년, 2년이 지난 지금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다. 9월 10일 LS엠트론 정음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래들(용광로에 쇳물을 옮기는 기구)에 쇳물을 붓다 뒤집혀 사망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동료는 새로 만든 용광로의 리모컨이 고장이 나 수작업으로 일을 진행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사건 이후 장시간

동안 취재 접근을 거부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도에서도 기업이 아닌 ‘전북 정음의 한 주물 공장’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회사 측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야간 근무와 회사 측의 안전 관리 부족이 부른 예견된 사고다.

LS그룹은 대한민국 연 매출 순위 9위의 재벌이다. 또한 LS엠트론은 2011년 4분기, 당기순이익만 8백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LS그룹은 주간2교대제와 신규 인력 확충이 아니라 기존 노동자들을 주야간근무로 착취하며 이윤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기계 고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다.

많은 작업장들이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고, 실제로 하루 평균 노동

자 여섯 명이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다. OECD 국가 중 1위다. 게다가 통계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만 포함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면 실제로 산재 사망은 훨씬 많다. 청년 두 명이 1천2백 도의 쇳물을 뒤집어 쓰고 안타깝게 사망한 이 사고가 노동자들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LS그룹은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보상해야 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주야간근무와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자들이 연대해 사용자에게 맞서 투쟁해야 한다. 영업이익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은 노동자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오정민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수필 인터뷰

“한국인들이 우리 싸움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수필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처럼 20대 초반에 한국에 왔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사는 것은 예상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제가 처음 일한 곳은 천안에 있는 전기포트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하는데, 때때로 새벽 3시까지 일해야 했죠. 하루에도 몇 차례 일하다가 감전되고, 심지어 바로 옆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기숙사 한 방을 다섯 명이 썼는데, 밤에 돌아와도 다른 사람이 자고 있어서 불을 켤 수조차 없었어요. 기숙사가 더러워지고 화재 위험이 있다며 밥도 못 해먹게 했어요.”

근무 조건도 열악했지만,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긴 것은 비인간적인 대우였다.

“한번은 같이 일하는 동료가 갑자기 피를 토해 병원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한국어를 몰라서 의사에게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병원에 같이 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택시 불러서 알아서 가라고 했어요. 더는 거기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필은 직장을 옮기려고 했지만, 사장이 허락하지 않았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직장을 옮기려면 수필이 사장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사장이 사업장 변동 신청서에 스스로 서명해야만 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직원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사장에게 전화하더니 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직장을 옮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뒤로 저는 한 달 동안 매일 노동부로 가서 그 직원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 직원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피했어요. 그런데 머물 곳도 마땅치 않았고, 저를 도와줄 곳도 없는 한국에서 제가 찾아갈 곳은 노동부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루하루 불법이 될까 봐 두려웠어요. 결국 한 달 만에 사장의 사인을 받아냈죠.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수필은 그러다가 서울에서 이주노동자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트남 친구에게 8월 19일 집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무조건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이후 웹사이트에서 집회 정보를 찾았고, 제가 아는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연락했어요. 한국어를 몰라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집회를 통해 잘 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집회에 참가하면서 수필에게 변화가 생겼다.

싸우고 저항하지 않으면

노동부 지침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주노조 등과 함께

집단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 뒤를 이어 이주하는 노동자들이

저처럼 부당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이런 집회에 참가한 것도 처음이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도 처음 봤어요. 다들 저처럼 고통스러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회와 행진이 끝났지만 쉽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은 정보를 원했어요. 앞으로의 계획과 일정도 알고 싶었고, 사람들의 얘기도 더 듣고 싶고, 또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주노조처럼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단체를 알게 된 것도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죠. 제가 직접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뻐요.”

“우리를 사람 취급 않는 정부”

집회가 끝나고도 노동자 1백여 명은 돌아가지 않았고, 한 번 더 집회를 하라고 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이들의 열의를 지지하고, ‘고용노동부 지침 철폐를 위한 전국비대위’에 ‘전국 이주노동자 집회’를 제안했다. 결국 9월 23일에 서울에서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회의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집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후 캄보디아, 베트남, 버마, 네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함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회의에 참가하면서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시위를 어떻게 조직하는지도 배우고, 조직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어요. 정부는 힘 있는 사장들 편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무관심하고, 노동자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혼자일 때는 외롭고 두려웠지만, 수필은 뜻을 함께하는 동료와 단체를 만나자 힘이 났다.

“지난주에 혼자 인근 지하철에서 한국



8월 19일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인들에게 사업장 변경 지침 철폐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그러다가 잡혀가고 추방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며 걱정합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저는 참고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싸우고 저항하지 않으면 노동부 지침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주노조 등과 함께 집단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 뒤를 이어 이주하는 노동자들이 저처럼 부당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린 한국에서 필요한 일을 하려고 여기에 왔어요. 이젠 한국 노동자들이 일하고 돈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욕심은 아니잖아요?”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늘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힘들어서 울어요. 우리는 건강을 해치고 노동조건도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일하다가, 몸 다 망치고 고국으로 돌

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업장에서 문제가 많아도 계약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해요. 그나마도 정부가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려 버렸고, 이제는 아예 사업장 이동조차 못 하게 해 버렸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인들이 알아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긴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해요. 한국인들이 함께 서명과 시위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공동소집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조직자 우다야 라이 인터뷰

“그동안 참을 만해서 참은 게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장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계속 개악해 왔습니다. 예컨대 계약 갱신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3회까지 가능한 사업장 변경 기회를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참을 만해서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제도를 더 나쁘게 바뀌도, 이를 제대로 알리고 싸우지 못하다 보니 참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최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항의가 커지고,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투쟁할 기회가 생기면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수만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수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노조에 참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저항 운동에 동참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용허가제 개악은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됐지만, 이번에는 노동자 전체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보다 더 나쁜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 많이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저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한국노동자와 똑같이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기 위해 싸우는, 또 그럴 권리가 있는 노동자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더 잘 이해하고, 굳게 뭉쳐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정리 이정원

노동부는 사업장 변경 지침 철폐하라!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9월 23일 (일) 오후 2시 | 서울역

주최 :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차비를 모금합니다!
모금계좌 : 신한은행 110-286-979210 정영섭

우리를 고무시키는 캄보디아 노동운동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이 최근 고용허가제 개악에 맞선 이주노동자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에는 캄보디아 노동자 1만 3천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캄보디아 현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노동자 운동이 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듯하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구가 1천4백만 명 정도인 가난한 나라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경제가 연평균 8퍼센트로 빠르게 성장했는데, GAP·H&M·리바이스 같은 유명 의류 브랜드에 납품하면서 외화 수입의 70퍼센트 이상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40만 명에 이르는 의류 공장 노동자들은 최

근까지도 국제빈곤선 기준인 하루 임금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해야 했다.

2010년 9월 정부가 최저임금을 4년 만에 고작 5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분노한 의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은 불과 사흘 만에 공장 90곳에서 2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으로 확산됐다. 이는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큰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이었다.

정부와 사측은 노조연맹 대표를 체포하고 활동가 수백 명을 해고하면서 탄압했지만, 2011년부터 노동자들의 정의와 파업은 급격히 늘어났다. 그 결과, 4년마다 인상되던 법정 최저임금이 2011년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3배이나 인상됐

고, 개별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됐다.

국내 자본가들에게 해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코트라를 보면, 한국의 자본가들이 캄보디아의 노동운동을 보며 자신들의 투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은 오히려 캄보디아인들에게서 활력을 얻고 있다.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권리를 위해 싸우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국적과 피부색만 같은 한국인 기업주보다 고국과 한국에서 비슷한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더 가까운 동지인 까닭이다.

김종환



2010년 캄보디아 의류 공장 노동자 파업 현지의 노동자 운동은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주고 있다.

‘부실’ 대학 선정 정책 — 파렴치한 고통 전가

정병호

교과부가 ‘부실’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자 해당 대학 학생과 졸업생 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출신 대학 삭제해야 할까요?”, “이 치욕이 십 년은 갈 겁니다”, “부모님이 ‘그러려고 너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서 학비 내고 그렇게 힘들게 다녔냐?’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부실’ 대학 학생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실제 부실한 교육 환경과 ‘부실’ 대학 학생이라는 낙인 때문이다.

부실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싶은 학생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대학생들은 정부 정책과 대학 재단들의 탐욕 때문에, 1년에 1천만 원가량의 값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낮은 교원 충원율, 캠퍼스 상업화, 재단 비리 등 질 낮은 교육 여건을 강요받았다.

정년 정부가 대학들의 교육 여건이 부실하다고 여긴다면, 그 대학들이 부실하지 않도록 재정을 투입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도록 감독하면 될 일이다. 취업률이 낮은 것이 문제라면, 정부 자신이 부자 증세를 통해 공공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면 된다.

그러나 ‘부실’ 대학 낙인찍기와 함께 도리어 이들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하고 있다.

이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 학생들은 ‘취업률이 낮다고 부실대로 낙인찍으면, 앞으로는 취업이 되거나 할까?’ 하고 분노하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립 재단들의 등록금 의존과 지출 삭감 유혹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볼 보듯 뻔하다.

이렇듯 정부의 ‘부실’ 대학 선정 정책은 부실 교육의 책임을 떠넘기며 학생들이 고통을 겪어지도록 강요하는 파렴치한 짓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다.

한편, ‘부실’대로 선정된 대학의 당국도 학생들에게 부실한 교육 환경을 강요한 장본인이다. 세종대는 옛 비리 재단이 복귀하면서 전횡을 일삼고 있고, 국민대의 경우도 전임교원 확충 요구와 등록금 추가 인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들은 학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학 당국들은 대학

정부의 ‘부실’ 대학 선정 정책은

부실 교육의 책임을 떠넘기며 학생들이 고통을 겪어지도록 강요하는 파렴치한 짓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다.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지표가 낮은 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2011년 선정된 ‘부실’ 대학 중 하나였던 원광대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원광대 당국은 ‘부실’ 대학 선정 6개월 만에 정부의 대학 평가 하위 15퍼센트 기준을 모방한 학교 평가 하위 15퍼센트 기준을 세워 11개 학과를 폐과하거나 통폐합했다.

정부와 대학 당국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데에는 한통속이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부실한 교육의 책임을 정부와 대학 당국에 물어야 한다. ‘부실’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사립 재단들의 자산을 교육 환경 개선에 쓰도록 요구해야 한다.

‘부실’ 대학 선정 정책의 배경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의 일환

정부의 ‘부실’ 대학 선정 정책은 재정 지원 차별화와 그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현재 대학 평가 항목에는 취업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성실히 공급하지 못한 대학들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 재단들은 정부의 이런 압박에 저항하기는커녕 지표상 취업률을 높이고자 인문계나 예술계 등 취업률이 낮은 계열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곤 한다.

한편,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단지 ‘부실’대로 선정된 대학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부실’ 대학 선정은 전체 대학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9월 10일 ‘부실’ 대학 선정에 항의하며 본관 로비를 점거한 국민대 학생들 ‘부실’ 교육의 책임은 학생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내팽개쳐 온 정부와 대학 당국이 저야 한다.

제시하는 각종 평가지표(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산학협력률 등)에서 탈락을 모면하고자, 대학 당국이 자발적으로 삭감과 구조조정에 나서곤 한다.

이는 대학 교육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대학 교육도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급 기술과 고급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 분야나 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는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재정 지원을 적게 하는 식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을 적게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주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등록금 수입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곳들은 퇴출도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여러 해 전부터 눈높이가 높은 대졸 실업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식으로 대학 퇴출과 정원 축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보편적 권리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수익성에 혈안이 돼, 고등교육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 대학 선정 문제를 직접적으로 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올라온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광범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대학 퇴출을 밀어붙이고 있다. 10년 안에 대학 1백 개는 없애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대학 경쟁력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구조조정을 지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보편적으로 누리면서 부실 사학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있다.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고등교육에 투입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고, 학생들은 더 나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실’ 대학 국공립화나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사학 재단에 대한 민주적 감시·통제 장치를 결합해야 한다.

국민대

학교 당국은 ‘부실’ 교육 환경 개선하라

지난 9월 10일 총학생회 주최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국민대 당국 규탄 집회가 열렸다. 학생 2백여 명이 집회에 참가해 그동안 학교 당국에 쌓인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에 국민대가 소위 ‘부실’ 대학에 선정된 이유 중에는 전임교원 확충률이 최하위인 것과 정부의 보잘것없는 등록금 인하 권고안조차 무시한 낮은 등록금 인하율이 포함돼 있다.

학교 당국은 지금껏 9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확충’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고, 대다수 학생들이 원했던 등록금 추가 인하 요구도 묵살했다. 뿐만 아니라 문대성 논문 표절 심사 결과도 발표 기한을 어기면서까지 발표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0일 집회는 그동안 학내 구성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계속 묵살해 온 학교 당국에 대한 분노였고, ‘부실’ 대학

선정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으로 큰 오명과 피해를 안긴 학교 당국과 재단에 대한 분노였다.

발언대에 선 한 학생은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들끼리 특정 학과를 비난하지 말고 단결해서 학생들을 돈벌이 상대로만 여기는 썩어 빠진 학교 당국에 맞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진정으로 부실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지 않는 학교 당국과 재단이고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이라는 발언에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크게 호응했다.

학생들의 분노는 결국 총장 면담을 요구하는 본관 항의 방문으로 이어졌다. 학생 50~60명이 총장실이 있는 본관 2층 로비를 1시간 가까이 점거하며 “총장 나와라!”, “전임교원 확충하라!”, “등록금을 인하라!”고 외쳤다.

오랜 대치와 본관 항의 점거 끝에 결국 총장은 모습을 드러냈고 총장과 처장단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총장은 ‘총장과 전체 학생 간담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다수의 국민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알릴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졸속으로 다음 날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학생 1백여 명이 총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대응책을 기대하며 간담회에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학교 당국은 전임교원 확충(이번 학기안에 77명의 전임교원 확충)과 취업률 개선책 등 그나마 이전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또 총장은 학생들이 우려하는 취업률 낮은 학교 통폐합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총장은 내년에도 우리 학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사퇴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학생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그나마 일부 진전된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등록금 인하와 시

간강사 임금 문제는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여 주지 않았다. 또 ‘교양 과목은 대형화하는 것이 맞다’며 학생들의 강의 개설 확충 요구를 묵살했다.

문대성 논문 표절 본심사는 왜 아직 발표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피조사자(문대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도 했다.

또 학교 ‘정원 수요 조절은 하겠다’며 몇몇 학과의 정원을 감축할 가능성은 열어 뒀다.

심지어 총장은 학생들의 소통요구에 “소통을 암만 많이 해도 성과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3개월 안에 수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제가 된 수치만 형식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학교 당국의 행정관료적 미봉책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지난 9월 10일 학생들의 용감한 행동이 총장을 간

담회 자리에 나오게 만들었듯이 학생들의 행동만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따라서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해 학생들의 요구를 모아내고 ‘전임교원 대폭 확충, 강의 개설 확대, 등록금 대폭 인하, 문대성 논문 표절 본심사 결과 발표와 책임자 징계, 시간강사 임금 인상과 황효일 강사노조 국민대 분회장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등 국민대를 진정으로 정상화시킬 요구안들을 관철시켜야 한다.

또한 비상학생총회 발의와 성사를 위해 이를 널리 알리고 준비할 광범위한 대책 기구를 건설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미 법과대학에서는 학과통폐합 결사반대, 등록금 인하, 전임 교원 수 및 강좌 수 대폭 확충 등을 요구안으로 걸고 학생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다른 단과대로도 이어져야 한다.

이아혜 국민대 학생

르노삼성

‘회사 살리기’가 아니라 투쟁이 희망이다

르노삼성 사측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백30여 명을 무더기 해고한 데 이어, ‘희망퇴직’이라는 위선적인 포장으로 정규직 노동자 8백여 명을 해고했다. 사측은 최근 “당분간 추가 감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자들의 걱정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09년 쌍용차에서도 비정규직 해고, ‘희망퇴직’은 대량해고로 가는 수순이었다. 게다가 업계에선 이미 르노삼성 매각 설과 수천 명 구조조정설까지 돌았다. 특히 남아 있는 3백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급속노조 르노삼성지회가 구조조정에 맞서 시한부 파업 등을 벌이며 투쟁을 시작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독약

르노삼성의 우파적인 기업노조는 사측의 ‘회사 살리기’ 논리에 타협해 고통분담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런 태도는 노동자들에게 독약과 같다. 일단, 사측이 말한 “신차를 통한 도약”은 지켜질 수 없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더구나 2008년 위기 직후 혹독한 고통전가와 대량해고로 급한 불을 껐던 르노는 다시금 하강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고통분담’이 결코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유럽의 2위 자동차 기업 푸조-시트로엥 사측이 악랄하게도 1만 명 해고와 공장 폐쇄를 추진하는 것을 보라. 생산을 마비시켜 사측에 타격을 가할 잠재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때,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비록 아직은 작지만 급속노조 르노삼성지회의 투쟁이 희망인 이유다.

급속노조와 완성차 노조들은 이 노동자들이 굳건히 싸울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한다.

박설



급속노조 르노삼성지회의 파업 집회

현대차 비정규직

적반하장식 손배 청구와 고소고발 중단하라

현대차 사측이 정규직지부와 임단협을 마치자마자 비정규직지회 활동가들에게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 관리자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게 이유다. 그리고 박현제 지회장을 비롯한 활동가 70여 명을 업무방해와 폭행으로 고소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사측은 비정규직 활동가들을 납치하고 폭력을 자행했으며 비정규직 파업을 폭력으로 공격했다. 지난 8월 21일 새벽에 사측은 관리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고, 용역의 폭력으로 한 조합원은 이빨이 부러지고 다른 한 조합원은 이마를 일곱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9월 13일에는 공장 안 천막 농성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사측이 비정규직 투쟁을 “불법”, “폭력”으로 몰아가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 누가 불법인가? 대법원이 몇 차례 내린 불법파견 판결을 수년째 무시하는 사측이야말로 구속대상이 아니던가. 에스제이엠과 만도 등 불법 용역 동원이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도 용역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았던 사측이야말로 진정으로 폭력 집단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을 뿐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자산이 무려 1백10.3퍼센트 증가해 1백90조 원으로 늘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현대차 사측이야말로 “불법”, “폭력” 집단이다 7월 21일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한 연대 한미당

이런 성과 뒤에는 수년간의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설움이 아로 새겨져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앞두고 손배소송과 고소로 비정규직 투쟁의 불씨를 죽이려 하고 있다.

공동투쟁

비정규직지회는 손배청구·고소와 협박에도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9월 8일 울산·아산·전주 3지회가 통합대의원대회를 열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본부’를 구성해 “사측안 폐기와 불법파견 인정,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비정규직지회 지도부가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

직 전환”이라는 ‘내부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혼란을 불식시키고 비정규직이 단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소식지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6대 요구안을 쟁취하겠다”며 현대차지부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연대를 호소했다. 따라서 정규직지부는 호소에 호응해 사측의 탄압을 좌절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지회를 방어하며 연대에 나선다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고, 이후에 벌어질 투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정규직 활동가들이 나서야 할 중요한 이유다.

김기선·허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하라!

재능교육 노조가 사측의 이른바 “최종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재능교육 사측은 해고자들의 순차적 복직이 아니라 일시 복직, 손해배상 철회 등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를 했지만, 노조의 핵심 요구였던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1천7백 일 넘게 싸워 온 노동자들로서는 받을 수 없는 부족한 안이었던 것이다. 사측은 위선적이게도 ‘단체협약은 일단 복직후에 논의하자’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이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측은 그동안 장기 투쟁하는 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온

갖 비난을 퍼부어 왔다. 무엇보다 사측은 지금 ‘학습지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하는 악법에 근거해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도 인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측이 제시한 ‘복직 후 논의’가 말뿐인 사기임을 보여 준다.

사기

사측이 악법을 들이대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악법에도 불구하고 재능교육에선 이미 수차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일도 있지 않았는가. 사측은 이번 제시안이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 주겠다’는 안’이라고도 말하지만, 투쟁 중에 암으로 사망한 이지현 조합원은 빠져 있다. 그래서 노조는 그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복직자 명단에 그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거리 농성을 지속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 코오롱, 폴텍폴텍 등의 노동자들과 함께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을 구성해 함께 연대 투쟁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4년 넘게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부산대 총장직선제 폐지

총장실을 점거한 교수들과 연대하자!

8월 24일, 부산대학교 총장직선제가 폐지됐다. 대학 평의회에서 모든 교수·학생들이 반대해 부결됐는데도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것이다. 정부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기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세우려고 학생·교직원들을 고통에 빠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총장직선제는 민주적 권리다.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더군다나 총장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여파로 실시됐다. 투쟁으로 얻어낸 민주적 권리를 정부가 다시 빼앗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것이다.

법인화

정부는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세워 국·공립대 법인화의 속도를 내려 한다.

부산대도 예외가 아니며, 법인화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내 구성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부산대 교수들은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8월 30일에 총장실을 점거했다. 총장이 교과부의 ‘국공립대 선진화 방안’에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도 총장직선제를 폐지했다며, 폐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총장직선제 같은 민주적 권리를 더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도 이런 교수들과 연

대해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해야 한다. 지난해 5천 명이 넘게 모인 부산대 학생총회는 ‘학생들에게도 총장선출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총장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구성원들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들도 교수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고, 더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 당국에 요구하자.

박준희 부산대 학생

공무원노조

임금 인상 위한 총회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6월 16일 1020 총회 투쟁 승리를 위한 공무원 노조 결의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20일에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노조 설립 신고조차 거부하는 정권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대선을 앞두고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노조 인정,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 등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이다.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 사이에선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불만이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1년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1백 인 이상 민간기업의 77.1퍼센트에 불과하다. 게다가 초과 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요구도 마찬가지다. 많은 기업들이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지금껏 이조차 받지 못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내고 나면 퇴직 후 노후도 걱정”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번 해보자’

2004년 파업으로 해직된 동지 1백38명을 복직시키고,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재판받고 있는 공무원노조·전교조 소속 1천9백여 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투쟁할 권리, 정치활동의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노동권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만나 보면, 총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높은 편이다. 그동안 위축됐던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느낀다. ‘한번 해보자’는 결의를 만들어나가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회를 대규모로 조직하고,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다가올 더 강력한 공격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스 등 유럽에선 공무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강력히 싸우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조합원들의 불만을 결집시켜 대규모 총회를 성사시키자. 이를 디딤돌 삼아 우리의 조직력을 키우며 투쟁을 건설해 나가자.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학생을 낙인찍는 학교폭력의 진정한 책임자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탄핵돼야 마땅하다

박태현 전교조 대의원

교과부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생활 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이어, 9월 11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정보를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학생도 입시와 취직에서 피해를 받게 된다. 이것은 헌법으로 금지된 이중 처벌이며,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인권 침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이를 거부하는 진보교육감들과 각급 학교를 감사하고, 징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최근 사회적 병폐들에 대한 책임과 불만을 소수의 개인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로 돌리려는 시도의 일부다. 이는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법과 질서'를 부르짖는 권위적인 우파들의 권력에도 도움이 된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박근혜가 사형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새누리당이 물리적 거세 법안을 발의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런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3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교과부장관 이주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 요구하고 전국의 교육공동체에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현재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단체들이 이주호를 고발하고 각 지역 시민단체 등이 이주호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MB맨’ 다운

이주호는 학교폭력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라고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강요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그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학교장에게 강요하며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형법상의 직권 남용을 했다. 게다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 내용은 어떤 정보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는데, 교과부 지침에는 소년법에 의한 처분 사항을 생기부에 직접 적도록 표현했다. 이것 자체가 명백한 법령 위반일



총체적 '멘붕 스쿨'의 주범 이주호는 물러나라! 9월 12일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전교조 활동가들

뿐더러, 하마터면 교과부 지침을 거부하기 힘든 일선 교사들까지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뻔했다.

무엇보다 이주호는 가장 대표적인 'MB맨'으로서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입시 경쟁과 청소년 억압을 강화한 주범이다.

이주호는 성과급, 교원평가, 일제고사라는 '공교육 붕괴 3대 정책'을 충실하게 실행하며 경쟁 교육을 강화했다. 또, 올 초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것을 막으며 학생 인권을 억압했다. 이런 정책에 맞서는 전교조 교사들을 대량 징계하며 탄압의 칼을 휘둘렀다.

또 사사건건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며 교육 개혁을 방해해 왔다.

이처럼 교육이란 미명 아래 온갖 불법한 조치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 현장을 '멘붕 스쿨'로 만들어 온 이주호는 명백히 탄핵갑이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거부하자

한편, 경기도 흥덕 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학교 20여 곳은 교과부 특별감사와 협박에 속에서도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 흥덕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교과부의 불법적인 감사에 대응하면서 학교폭력 기록은 "학교폭력을 또 다른 폭력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학생부에 적는다고 학교폭력이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지침에 따르면, 친구 사이의 우발적인 싸움으로 서면 사과를 해도 생기부 기록이 남는다. 서울에서는 한 초등학교생이 놀이터에 친구를 비방하는 낙서를 했다는 기록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남게 된 사례도 있다. 또 경남에서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을 막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극단적인 사

례도 있었다. 학교폭력 기재로 학생을 낙인찍고, 담임교사와 친구들이 함께하는 진정한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과부의 생기부 기록 지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한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퇴진해야 한다.

반갑게도 전교조는 9월 1일 대의원 대회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안 기재 거부 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전교조 전남지부는 진보교육감이면서도 교과부의 지침을 그대로 하달한 장만채 교육감에 항의하며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과부 지침에 항의하며 특별 근무를 섰던 김상곤

교육감을 응원하고, 교과부 특별감사에 항의하는 농성을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2일에 "학교폭력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자발적 거부 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이런 움직임들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은 전북처럼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 최근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중간에 삭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도입할 경우 생기부 기재를 받아들이는 어정쩡한 타협안을 냈는데, 이런 후퇴는 투쟁의 힘을 뺏 뿐이다.

전교조는 진보교육감이 자신의 소임을 수행할 때는 응원하며 연대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징계 대응 방침 등을 밝히면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에게 상복 대신 작업복을”

쌍용차 '살인해고' 문제가 국회 정쟁으로 부각된 것은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낳은 성과다.

최근에도 공지영의 쌍용차 르포 《의자놀이》는 베스트셀러 상위에 올랐고, 조계종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기원하는 '10만 배'를 계획했다.

9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상복 대신 작업복을 입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속에서 9월 20일 예정된 쌍용차 청문회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는 쌍용차 사장 이유일, 마힌드라 사장 파완 고엔카, 금융감독원·산업자원부·산업은행·회계법인 등의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선다. 아만적 폭력 진압의 책임자였던 조현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10년 동안 쌍용차의 여섯 차례

매각은 모두 정부가 주도했다. 구조조정과 '먹튀'를 우려한 노동자들 반대도 무시하고 상하이차와 마힌드라에 매각을 강행한 것은 전·현 정부다.

2009년에 이명박은 "오죽하면 회사가 해고를 하겠냐"며 살인 해고를 정당화했고, 이 과정에서 회계조작도 이뤄졌다. 경찰은 테이저건·최루액 등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고, 올 3월에 이를 '잘 된 수사 사건' 베스트 5위로 꼽으며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고통전가

그러는 동안 2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수많은 노동자·가족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만약 정부가 '공기업화'로 일자리를 보장했다면 이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

나 지배자들은 전방위적인 공모를 통해 쌍용차를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

이번 청문회에선 이런 죄상이 낱알이 밝혀져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강제력도 없고 처벌 요구 권한도 없는 청문회를 넘어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해고자 전원 복직이 뒤따라야 한다.

악랄한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쌍용차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하며 야비한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 김황식은 쌍용차 노동자·가족의 비극적 죽음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부정했다.

박근혜도 국회 내에서 '쌍용자동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조차 반대



5월 19일 쌍용차 범국민대회 쌍용차 노동자들은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을 폭로하며 정치적 초점이 되고 있다.

하며, 위선적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본색을 드러냈다.

따라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려면, 운동을 한층 더 확대해야 한다.

쌍용차지부와 범대위는 청문회 다음 날인 9월 21일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진보진영, 특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이 투쟁에 적극 함께하자.

유병규